국민 곁에 존재한 든든한 119

- 2024년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자료

2024. 8.

소 방 청
National Fire Agency

▒ 목 차 ▒

Ⅰ. 심사대상 목록 5

Ⅱ. 소방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1. 한국판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119 Reborn Club) 운영(대변인) 12
2. 상황전파 대상 확대를 통해 빈틈없이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상황실) 16
3.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감소로, 7,400억 상당 사회적가치 창출(보건안전담당관 ①) 19
4. 마음이 건강한 소방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보건안전담당관 ②) 24
5. 철거되는 건물에서 국민의 안전이 싹튼다.(대응총괄과 ①) 29
6. 건축물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대응총괄과 ②) 34
7.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 맞춤형 화재안전시설로 잡는다!(화재대응조사과①) 39
8. 소방서 차고 앞 불법 주차? 소방청-경찰청 협업으로 차단!(화재대응조사과 ②) 43
9. 소방의 국제화를 통해 대한민국 재난 대응 역량의 수출길을 열다.(구조과) 47
10. 해외에서 아플 때도 119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서비스 운영(119구급과) 50
11. 병원과 일치된 응급환자 분류 방식 도입으로 '응급실 뺑뺑이 ' OUT!(구급역량개발팀) 55
12. 공장 신축 단계부터 인허가 완공까지 K-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 등판(화재예방총괄과 ①) 60
1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NAVER에서 확인하세요.(화재예방총괄과 ②) 64
14. 국가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 개선 위험물 관리 규제 혁신(위험물안전과 ①) 67
15. 국민에게 밀접한 위험물 규제를 개선하여 불편사항을 해결하다(위험물안전과 ②) 72
16. "일하러 나갔다가 안와서 가봤더니..." 신고하지 못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단독사고 이젠 그만!(생활안전과) 77
17. 극한의 재난환경에서도 국민을 구조하고 안전하게 복귀하라(장비총괄과 ①) 81
18. 소방차량 긴급출동시 운행 안전과 연간 3억원 이상 예산절감까지(장비총괄과 ② 85
19. 국민 생명존중 프로젝트 그 어떤 환경에서도 위급한 환경에 처한 국민을 반드시 구조하고 살아서 돌아오라(소방항공과) 88
20. 청각·언어 장애인의 긴급상황, 이제 119로 직접 신고하세요!(정보통신과) 92

Ⅲ. 중앙소방학교 적극행정 우수사례

21. 디지털 대전환 시대, 생성형 AI로 소방 교육과 현장 대응의 혁신을 이루다(교육지원과) 96

Ⅳ. 중앙119구조본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22. 전기사용량 분석과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기획협력과) 101

'23년 상반기 소방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대상 목록(22건)

연번	부서	구분	내용
1	소방청 대변인	사례명	한국판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119 Reborn Club) 운영
		주요내용	○ 일반인이 119 도착 전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소생률이 2배 정도 증가 ○ 하지만 대한민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의료 선진국보다 낮은 실정 ○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119 Reborn Club)」를 운영
2	소방청 상황실	사례명	상황전파 대상 확대를 통해 빈틈없이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
		주요내용	○ 광역지자체(17개 시·도) 자동전파 수신처 확대추진 - 119신고 접수 시 재난 발생지역 지자체(광역·기초)로 일괄 자동 전파되어 재난 상황전파의 신속성 제고 ○ '구급(5종)', '기타(10종)' 자동전파 재난종별 확대 추진 - 교통사고, 가스중독, 사고부상 등 구급 재난 및 산사태, 풍수해, 배수 지원 등 기타 재난 관련 자동 상황전파로 여름철 자연재해에 철저 대비
3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1)	사례명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감소로, 7,400억 상당 사회적가치 창출
		주요내용	○ 매년 재난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방공무원 순직사고로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과학적 사고원인 조사·분석·실증·대책 추진, △중앙 차원의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현장 안전관리 실행력 강화와 현장안전점검관의 전문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규정 개정, △현장지휘관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실무교육 콘텐츠 개발·배포·직접 교육, △중요 현장 대원안전 사고 재발방지 재강조 및 컨설팅 강화 ○ 중앙의 탑다운 방식을 탈피한 적극적 안전사고 사례전파, △자체 사고조사팀 운영 활성화 및 특정시기 사고예방 점검 강화, △소방공무원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 정책 추진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4.2명 순직사고에 비해 52% 감소로 7,400억 상당 사회적가치를 창출함

연번	부서	구분	내용
4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2)	사례명	마음이 건강한 소방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주요내용	○ 각종 재난현장에서 24시간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은 지속적으로 참혹한 현장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실정 ○ 이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예방과 치유를 위해 소방청에서는 다양한 '마음건강 보건안전지원 사업'을 운영 ○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개선을 위해 심리상담 전문인력이 포함된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운영으로 적극적인 심리안정 및 치유 추진
5	소방청 대응총괄과(1)	사례명	철거되는 건물에서 국민의 안전이 싹튼다.
		주요내용	○ 소방청-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업해 재건축 및 재개발 건축물 철거 전 훈련장소로 활용해 예산을 절감 ○ 재난현장과 유사한 현장경험 축적 및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 하는 등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 사례
6	소방청 대응총괄과(2)	사례명	건축물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
		주요내용	○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 전문가는 소방공무원 우리 자신이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전제조건은 현장안전 확보 필요 ○ 건축물사고 발생 시 관계기간 도착 전 현장활동 대원의 건물 안전점검과 위험성 평가 등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과정 기획·운영
7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1)	사례명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 맞춤형 화재안전시설로 잡는다!
		주요내용	○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 증가('14년 1%에서 '23년 7%). 주택 화목보일러 화재, 대형 산불로의 확산 방지 및 피해 저감을 위해 ○ 한국화재보험협와 협력, 맞춤형 화목보일러 주택 화재안전 시설물품 예산 확보(약 5억 원),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극복(적극행정위원회 활용)하고 화재안전시설 전국 설치 확대(1만여 개소)로 화재·산불 피해 저감
8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2)	사례명	소방서 차고 앞 불법 주차? 소방청-경찰청 협업으로 차단!
		주요내용	○ 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어 매우 중요하나, 일부 시민들은 소방차 진·출입로인 소방서 차고 앞에 주·정차를 하는 등 미성숙한 불법 행위가 만연한 실정 ○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업하여 소방서 차고 앞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관리로 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정책 개선함

연번	부서	구분	내용
9	소방청 구조과	사례명	소방의 국제화를 통해 대한민국 재난 대응 역량의 수출길을 열다.
		주요내용	○ UAE 국방부는 기후변화 관련 재난 위기를 체감하고 대한민국 소방의 탐색·구조분야 모범사례 견학 등 공식 외교공한을 통해 기관방문 요청 ○ 동 방한을 계기로 국가 간 재난 대응 협력* 신규 사업을 자체 발굴, 적극적인 행정 및 실무 추진으로 소방의 국제화 실현 발판 마련 ※ 국가 간 현장대원 역량강화, 우호관계 제고, 구조역량 수출로 경제효과 창출 기대
10	소방청 119구급과	사례명	해외에서 아플 때도 119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서비스 운영
		주요내용	○ 해외에서 질병·부상 시 현지 의료정보가 부족하고 높은 치료비용과 언어 장벽으로 재외국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 등을 놓쳐 치료가 지연되거나 더 큰 질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재외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해외에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등 체계 구축 ○ 영사 조력, 현지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환자 국내 송환을 위하여 재외공관에 소방주재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11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	사례명	병원과 일치된 응급환자 분류 방식 도입으로 ‘응급실 뺑뺑이‘ OUT!
		주요내용	○ 119구급대는 병원이송 前 단계에서 병원과 동일한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방식을 도입함으로 일치된 환자분류법 시행 ○ 이를 기반으로 중소병원과 종합병원에 적절한 환자를 이송함으로써 ‘응급실 뺑뺑이‘가 없도록 과밀화를 해소 ○ 환자의 치료 시간을 단축하고, 의료지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

연번	부서	구분	내용
12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1)	사례명	공장 신축 단계부터 인허가 완공까지 K-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 등판
		주요내용	○ 국가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정책기조에 따라 국가첨단산업 공장의 신속한 인허가와 안전한 공정을 위해 **소방청・소방본부・지자체 중심**으로 운영 ○ ①각 종 문제 해결지원, ②정보제공, ③유기민원을 본부에서 일괄 신속처리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해결 ○ **“결국 규제합리화 실현”** 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발전** 초석 마련사고위치 특정 가능
13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2)	사례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NAVER에서 확인하세요.
		주요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인증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는 영업주 의무이며, 안전관리 독려를 위해 우수업소 인증 제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효과가 미미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 추진
14	소방청 위험물안전과(1)	사례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 개선 위험물 관리 규제 혁신
		주요내용	○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성 제고에 더해, 반도체 및 이차전지 제조를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의 설비기준 완화 특례 규정을 두어 신속한 민원처리 및 비용 감소 도모함
15	소방청 위험물안전과(2)	사례명	국민에게 밀접한 위험물 규제를 개선하여 불편사항을 해결하다
		주요내용	○ 화재·폭발 등 사고 우려하여 셀프주유소에서 1회 주유량 및 주유시간 엄격하게 제한(경유 200리터, 4분)으로 제한 하였으나, ○ 합리적으로 완화(600리터, 12분) 하였으며, 재난현장에서 재난차량 이동주유를 제도적으로 허용하여 화재현장에서 연속성을 제고함

연번	부서	구분	내용
16	소방청 생활안전과	사례명	“일하러 나갔다가 안와서 가봤더니...” 신고하지 못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단독사고 이젠 그만!
		주요내용	○ 농촌 안전사고 세부 분석(농기계 사고, 농약중독, 뱀물림 등) ○ 소방청-농진청 농업인 안전교재 공동 제작 및 안전 교육 제공 ○ 반복적이고 사고 예방이 가능한 농기계 개선 추진 ○ 승용 농기계‘사고 알람 단말기’시스템과 119상황실과 대응체계 협업
17	소방청 장비총괄과(1)	사례명	극한의 재난환경에서도 국민을 구조하고 안전하게 복귀하라
		주요내용	○ 건물 내부 화재 등 극한 환경에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열화상 장비와 대원위치추적 및 생체신호 취득 장비가 도입되고 있으나, 환경이 양호한 소수의 현장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이에 현장의 정보를 우선 취득·활용하여야 할 대원의 헬멧 등에 결착 가능한 첨단 영상장비(열화상 및 연기투시용 시야개선 장비)를 도입하여 위험에 처한 국민과 현장대원의 안전 확보.
18	소방청 장비총괄과(2)	사례명	소방차량 긴급출동시 운행 안전과 연간 3억원 이상 예산절감까지
		주요내용	○ 도로교통공단에서 유상으로 수강하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자체 개설하여 전국 소방관서에 무상교육 제공하고 일정에 제한되지 않도록 편리한 상시 수강(사이버교육) 및 관리체계 마련 ※ 교육 개설 후 3개월간 수료자 37,609명(신규 13,433, 정기 24,176명), 예산절감 7억원

연번	부서	구분	내용
19	소방청 소방항공과	사례명	호수, 강, 바다 등 헬기 수상추락 사고 시 민간헬기 탑승대원 생존율 향상 제고 목적, 헬기 동체 탈출 및 생존수영 등 실전 훈련 추진
		주요내용	○ 최근 10년간 헬기가 담수 접근 중 추락 등 수상 추락사고로 사망자가 지속적 발생(7건 발생, 사망 6명) ○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서울·부산 지방항공청과 협의, 민간헬기 탑승대원 대상 수상생환 훈련과정 개설 ○ 국내 최초, 민간 헬기업체 8개 기관 44명의 교육생 배출, 항공대원 생존율 향상 등 민간헬기 대원 안전 관리 강화 기여
20	소방청 정보통신과	사례명	청각·언어 장애인의 긴급상황, 이제 119로 직접 신고하세요!
		주요내용	○ 소방청-손말이음센터 간 협업을 통해 119 신고 시스템과 손말이음센터 통신중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청각·언어 장애인이 긴급상황을 직접 119로 영상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 119 신고를 통한 일원화된 실시간 3자 영상통화* 서비스 제공 * 장애인 ⇄ 손말이음센터 ⇄ 119종합상황실
21	중앙소방학교 인재개발과	사례명	디지털 대전환 시대, 생성형 AI로 소방 교육과 현장 대응의 혁신을 이루다
		주요내용	○ 소방청 중앙소방학교는 디지털 AI 기술을 활용해 소방교육과 현장 대응 효율성을 높임. ○ 기술 도입 초기의 난관을 극복하고, 교직원 및 교육생의 역량을 강화하였고 AI 기반 교육 콘텐츠와 챗봇을 개발하여 쉽고 빠른 대응이 가능 ○ 이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과 현장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었음.
22	중앙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	사례명	전기사용량 분석과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
		주요내용	○ 부서별 전기 사용량 정밀 분석, 전기절약 및 계약전력 조정 ○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통한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 및 탄소중립 등 기후환경 운동 적극 동참

사례번호 ①

소방청 대변인
적극행정 우수사례

<table>
<tr><td colspan="2">사례제목[1]
(정책명[2])</td><td colspan="5">- 국민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여라!-
한국판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119 Reborn Club) 운영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119Rebobrn Club」운영 사업)</td></tr>
<tr><td colspan="2">사례요약[3]</td><td colspan="5">일반인이 119 도착 전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소생률이 2배 정도 늘어난다. 하지만 대한민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의료 선진국보다 낮은 실정으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119 Reborn Club)」를 운영한다.</td></tr>
<tr><td colspan="2">기관명[4]
(부서명)</td><td colspan="5">소방청
(대변인실)</td></tr>
<tr><td rowspan="2">분야[5]</td><td>1차</td><td colspan="5">규제혁신 여부 Y □ N ■</td></tr>
<tr><td>2차</td><td colspan="5">역동적 경제 □ 살기좋은 대한민국 ■ 담대한 미래 □ 따뜻한 동행 □
기타 □ (직접입력 :)</td></tr>
<tr><td colspan="2" rowspan="4">공적자[6]</td><td>구분</td><td>부서명</td><td>직급</td><td>성명</td><td>연락처</td></tr>
<tr><td>주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
<tr><td>부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
<tr><td>부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각종대회
수상실적[7]</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가점대상 여부[8]
(입증자료 필수)</td><td colspan="5">국민추천사례(+3점) □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3점) ■
※ 온국민소통 활용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사회적 재난 대응(+3점) □
협업사례(+3점) □</td></tr>
<tr><td colspan="2">기타 해당 여부[9]</td><td colspan="5">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사례 □
기관 중점 추진과제 ■
※ 2024년 소방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119리본클럽」 운영 활성화를 통한 성과 창출</td></tr>
<tr><td rowspan="2">사례내용</td><td>상황[10]</td><td colspan="5">이태원 참사(사상자: 355명)를 계기로 심정지 환자 목격 시 일반인 심폐소생술 수준에 대한 한계점 노출, 범국민 인식 개선·CPR 교육 개선 대책 필요
- 매년 심폐소생술 홍보를 진행하지만, 일반인 CPR 시행률은 의료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실정 → 홍보전략 변화 필요
※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대한민국('23년 29.3%), 영국('20년 70%), 미국('20년 40.2%)

조희연 "이태원 참사 안타까워…CPR 등 안전교육 획기적 강화"
(이데일리/'22.10.)
조희연 "CPR등 안전교육 획기적 강화"

문화일보
유럽소생위원회, 이태원 참사 현장 CPR에 "최적 아닌 사례 많았다"
(문화일보/'22.12.)
이태원 참사 CPR "최적 아닌 사례 많아"

MBN
국민 10명 중 4명이 몰랐다…'이태원 참사' 분석 한 전문가 CPR 권고는?
(MBN/'22.12.)
CPR 국민 10명 중 4명이 몰랐다</td></tr>
<tr><td>난관[11]</td><td colspan="5">119리본클럽의 성공적인 출범으로 창설 가치와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하였으나, 클럽에 대한 지원 방안과 구체적인 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함</td></tr>
</table>

적극[12]

□ 클럽 지원 방안

❶ 유사 모임인 화상 환자 모임 ‘해바라기회’와 간담회를 추진하여 클럽 운영 형태 및 지원 등을 참고하여 클럽 회원이 심정지 이후 건강관리 및 활동 사기 증진을 위해 매년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의학연구소와 전달식 추진함

❷ 미국 심정지 소생자 연대 CASA(Cardiac Arrest Survivor Alliance)를 벤치마킹하여 심정지 소생자 모임인 119리본클럽을 소생자 외 지원자(관련 학계, 심리·정신의학 전문가, 후원기업, 재단 등) 그룹과 구조가(119 구급대원, 일반인 하트세이버 등) 그룹으로 확대 운영함

□ 주요 활동 프로그램 마련

❶ (홍보방식개선) 감동·교육을 모두 잡은 심폐소생술 중요성 홍보

-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살린 구조자와 생명을 되찾은 소생자들의 소중한 경험**을 전하는 **‘나의 하트세이버 이야기’** 대국민 참여 **이벤트** 진행



대국민 홍보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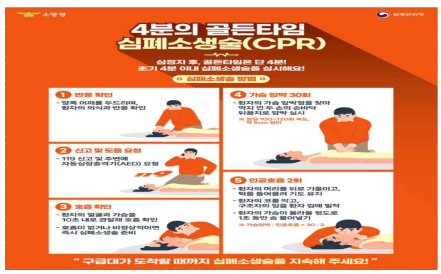


참여자 글 연재 후 출판 예정

- 정보전달형 심폐소생술 교육을 벗어나, **사례 중심 경험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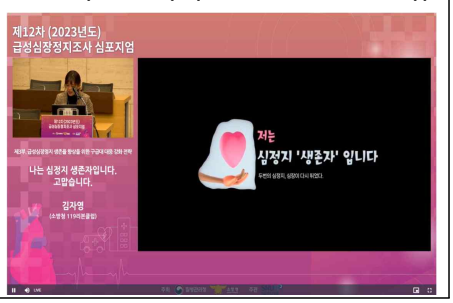
운영 前

·정보 전달형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 後

·심정지 소생자의 생생한 경험담 공유



❷ (생명존중문화 확산) **국민과 함께하는「두근두근런」 마라톤 개최**

- 심폐소생술 전도사 양성을 위한 행사로, 기록 달성이 목표인 기존 대회와 차별화된 홍보·행사 진행으로 입소문 마케팅 이슈 창출

<table>
<tr><td></td><td></td><td>
<table>
<tr><td>
</td><td>
</td></tr>
<tr><td>행사 슬로건</td><td>핵심이미지(국민+일구+119구급대원)</td></tr>
</table>
※ 참가비 중 일부를「한국심장재단」등 기부를 통해 사회 공헌 예정
</td></tr>
<tr><td></td><td>효과[13] 및 미담사례[14]</td><td>
□ 국가기관 운영 커뮤니티 내 감사의 글 여러 건 게재
<table>
<tr><th>글쓴이</th><th>내용</th><th>채널명
(운영기관)</th></tr>
<tr><td>*윤*</td><td>119리본클럽에 대하여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번 깨닫습니다.</td><td>국민생각함
(권익위원회)</td></tr>
<tr><td>*태*</td><td>덕분에 119리본클럽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더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되는데 더 많은 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댓글과 추천을 남기고 갑니다.</td><td>국민생각함
(권익위원회)</td></tr>
<tr><td>익명</td><td>국민을 위하는 소방청과 소방관 모두에게 감사합니다.</td><td>온국민소통
(행정안전부)</td></tr>
<tr><td>익명</td><td>119리본클럽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기를 바랍니다.</td><td>온국민소통
(행정안전부)</td></tr>
</table>
□ 언론/방송/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에서 CPR의 중요성 부각
※방송출연 6회, 언론홍보 210여회, 기획보도 2회, 워크숍 발표 4회
<table>
<tr><td></td><td></td><td>
</td><td></td></tr>
<tr><td>JTBC ‘Sound of life’</td><td>JTBC 뉴스보도</td><td>연합뉴스 뉴스보도</td><td>TV조선 ‘명의도감’</td></tr>
<tr><td></td><td></td><td>
</td><td></td></tr>
<tr><td>TV조선 ‘장수상회’</td><td>MBC ‘로또방송’</td><td>FPN 소방잡지 10월호</td><td>문화일보 기획기사</td></tr>
</table>
</td></tr>
</table>

사례번호 ②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적극행정 우수사례

<table>
<tr><td>사례제목[1]
(정책명[2])</td><td colspan="4">상황전파 대상 확대를 통해 빈틈없이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
(「NDMS 자동상황전파 대상 확대 고도화」)</td></tr>
<tr><td>사례요약[3]</td><td colspan="4">○ (기존) 119신고의 경우 화재, 구조 등 긴급구조에 해당하지 않은 재난 상황 접수 시 상황전파 지연·누락 등 재난관리 사각지대 발생 우려
○ (확대) 재난관리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기관이 위험상황을 정확히 인식·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연속성 강화


❶ 광역지자체(17개 시·도) 자동전파 수신처 확대추진
- 119신고 접수 시 재난 발생지역 지자체(광역·기초)로 일괄 자동전파되어 재난 상황전파의 신속성 제고
❷ ‘구급(5종)’, ‘기타(10종)’ 자동전파 재난종별 확대 추진
- 교통사고, 가스중독, 사고부상 등 구급 재난 및 산사태, 풍수해, 배수 지원 등 기타 재난 관련 자동 상황전파로 여름철 자연재해에 철저 대비</td></tr>
<tr><td>기관명[4]
(부서명)</td><td colspan="2">소방청
(119종합상황실)</td><td colspan="2">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td></tr>
<tr><td rowspan="2">분야[5]</td><td>1차</td><td colspan="4">규제혁신 여부 Y ☐ N ☐</td></tr>
<tr><td>2차</td><td colspan="4">역동적 경제 ☐ 살기좋은 대한민국 ☑ 담대한 미래 ☐ 따뜻한 동행 ☐
기타 ☐ (직접입력 :)</td></tr>
<tr><td>공적자[6]</td><td colspan="4"><table><tr><th>구분</th><th>부서명</th><th>직급</th><th>성명</th><th>연락처</th></tr><tr><td>주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tr><td>부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tr><td>부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table></td></tr>
<tr><td>각종대회 수상실적[7]</td><td colspan="4">해당 없음</td></tr>
<tr><td>가점대상 여부[8]
(입증자료 필수)</td><td colspan="4">국민추천사례(+3점) ☐ 사회적 재난 대응(+3점) ☑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3점) ☐ 협업사례(+3점) ☑
※ 과제명 ※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td></tr>
<tr><td>기타 해당 여부[9]</td><td colspan="4">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사례 ☐ 기관 중점 추진과제 ☐
※ 종류 및 일자
위원회 0회(22.05.20), 사전 컨설팅 0회
※ 과제명</td></tr>
<tr><td rowspan="2">사례내</td><td>상황[10]</td><td colspan="4">○ 소방청에서 행전안전부로 제공하는 119출동정보 데이터 중 화재 및 구조 종별 정보에 대해서만 NDMS 상황전파시스템(상황</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용</td><td></td><td>전파메신저)을 통하여 지자체 등에 자동전파 하였음.
- ‘23년 경북 산사태 및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발생 당시 상황전파시스템을 통한 자동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지자체(광역·기초)로 재난전파의 신속성이 떨어져 자동전파 대상 확대를 추진</td></tr>
<tr><td>난관[11]</td><td>○ (정보제공 미동의) 소방청 관련부서 및 전국 재난상황실 대상 자동상황전파 정보제공 동의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시도에서 자동상황전파 확대 수신 시 과부하 우려로 미동의 의견제시
○ (시스템 장애발생) 소방출동정보 연계 확대에 따른 데이터 조회 과부하로 미조회 데이터 발생 및 지연 발송 등 장애 발생
○ (불편 민원 접수) 재난으로 판단하기 힘든 단순 사고정보(벌집 제거, 시건개방 등)가 걸러지지 않고 광역지자체로 전파되어 시도 재난상황실의 상황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불편 사항 접수</td></tr>
<tr><td>적극[12]</td><td>○ (정보제공 동의도출) 시도 재난상황실에 자동상황전파 대상 확대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며 정보제공 동의 도출
○ (시스템 장애개선) 소방출동정보 연계 쿼리문 수정(데이터 조회 건수 확대)을 통해 시스템 장애 개선 후 지속 모니터링
○ (불편 민원 해소) 전국 재난상황실에 자동상황전파 재난종별 재편성 의견조회 실시, 불편 민원 해결을 위한 부처 이견 조율
- 다수 인명피해 우려 재난정보추가 및 재난으로 판단하기 힘든 단순 사고 정보 제외 등 자동 상황전파 재난 종별 재편성(45종 → 38종) 추진</td></tr>
<tr><td>효과[13] 및 미담사례[14]</td><td>
<table>
<tr><th colspan="2">기존</th><th colspan="2">1차 개선</th><th colspan="3">2차 개선</th></tr>
<tr><th>종별</th><th>분류</th><th>종별</th><th>분류</th><th>종별</th><th>분류</th><th>상세내용</th></tr>
<tr><td rowspan="2">화재</td><td rowspan="2">10종</td><td>화재</td><td>10종</td><td>화재</td><td>10종</td><td>일반·대형·지하·고층·산불·특수·차량·기타·속보설비·약자시설</td></tr>
<tr><td>구조</td><td>20종</td><td>구조</td><td>13종</td><td>붕괴·산악·수난·교통·기계·EV·추락·약물·폭발·항공·수색·재해·화학</td></tr>
<tr><td rowspan="2">구조</td><td rowspan="2">20종</td><td>구급</td><td>4종</td><td>구급</td><td>5종</td><td>교통사고·가스중독·화상·부상·사고부상</td></tr>
<tr><td>기타</td><td>11종</td><td>기타</td><td>10종</td><td>산사태·전기·가스·환경·응원·재해·풍수해·배수·급수·한해</td></tr>
<tr><td colspan="2">총 30종</td><td colspan="2">총 45종</td><td colspan="3">총 38종</td></tr>
</table>
❶ (기존) 기초지자체(일부광역) → (개선) 17개 시·도(광역) 및 228개 시·군·구(기초)
❷ (기존) 총 30종(화재 10, 구조 20) → (1차 개선) 총 45종(화재 10, 구조 20, 구급 4, 기타 11) → (2차 개선) 총 38종(화재 10, 구조 13, 구급 5, 기타 10)</td></tr>
</table>

사례번호 ③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적극행정 우수사례(1)

<table>
<tr><td colspan="2">사례제목[1]
(정책명[2])</td><td colspan="5">소방공무원 순직사고 감소로, 7,400억 상당 사회적가치 창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를 통한 순직·안전사고 저감</td></tr>
<tr><td colspan="2">사례요약[3]</td><td colspan="5">매년 재난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방공무원 순직사고로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과학적 사고원인 조사·분석·실증·대책 추진, △중앙차원의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현장 안전관리 실행력 강화와 현장안전점검관의 전문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규정 개정, △현장지휘관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실무교육 콘텐츠 개발·배포·직접 교육, △중요 현장 대원안전사고 재발방지 재강조 및 컨설팅 강화, △중앙의 탑다운 방식을 탈피한 적극적 안전사고 사례전파, △자체 사고조사팀 운영 활성화 및 특정시기 사고예방 점검 강화, △소방공무원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 정책 추진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4.2명 순직사고에 비해 52% 감소로 7,400억 상당 사회적가치를 창출함</td></tr>
<tr><td colspan="2">기관명[4]
(부서명)</td><td colspan="5">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td></tr>
<tr><td rowspan="2">분야[5]</td><td>1차</td><td colspan="5">규제혁신 여부 Y ☐ N ☑</td></tr>
<tr><td>2차</td><td colspan="5">역동적 경제 ☐ 살기좋은 대한민국 ☑ 담대한 미래 ☐ 따뜻한 동행 ☐
기타 ☐ (직접입력 :)</td></tr>
<tr><td colspan="2" rowspan="4">공적자[6]</td><td>구분</td><td>부서명</td><td>직급</td><td>성명</td><td>연락처</td></tr>
<tr><td>주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
<tr><td>부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
<tr><td>부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각종대회 수상실적[7]</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가점대상 여부[8]
(입증자료 필수)</td><td colspan="5">국민추천사례(+3점) ☐ 사회적 재난 대응(+3점) ☐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3점) ☐ 협업사례(+3점) ☐</td></tr>
<tr><td colspan="2">기타 해당 여부[9]</td><td colspan="5">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사례 ☐ 기관 중점 추진과제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강화</td></tr>
<tr><td rowspan="2">사례내용</td><td>상황[10]</td><td colspan="5">· 재난 양상의 대형·복합·다양화로 소방수요 증가 및 현장 위험성으로 현장활동대원 순직 및 부상 발생 가능성 상존
· 최근 10년간 위험직무순직 42명(연평균 4.2명), 최근 5년간 안전사고 2,472명(연평균 494명), 소방차 교통사고 1,033건(연평균 207건) 발생</td></tr>
<tr><td>난관[11]</td><td colspan="5">· 현장 안전관리 정책 등 추진에도 불구, 예상치 못하는 화재현장에서의 돌발 붕괴, 급격한 연소확대 등으로 순직사고 발생</td></tr>
</table>

		· 현장활동 중 떨어짐 · **추락사고는 중상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음** · **신규임용(5년미만)** 소방대원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 대책 절실 · **편도 3차로 이상**일 경우 1 · 2차선 차량에 시야가림 현상 및 상대차량 발견의 어려움으로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 높음**
	적극[12]	· **(추진방향 설정)** 현장 안전사고 분석결과를 반영한 **약점관리**(경력 5년미만의 신임자, 추락사고, 교차로 교통사고 등)와 **강점관리**(현장안전점검관 역량 강화, 사고조사팀 운영 활성화, 현장안전관리 규정 · 시행 등)의 **위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계획(P) → 실행(D) → 점검(C) → 개선(A)의 **데밍사이클***을 적용하여 **현장사고 저감**시키는 방향을 설정 * **데밍사이클** ➟ 경영분석 도구의 하나로 **Plan-Do-Check-Act**를 나선형으로 진행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 · **(종합계획 수립)**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 알림, 시 · 도 소방본부 및 전국 235개소 소방관서 '**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적극 이행을 위한 컨설팅 추진 ※ ┌**(기본대책)** 제도·체계, 교육·훈련, 점검·컨설팅, 조사·분석 **4개 분야 16개 과제** └**(중점대책)** 사고다발 '추락', '교차로 교통사고' 집중관리 등 **9개 과제** · **(사고조사단 운영)** 현장 순직 및 중요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소방청 사고조사단 구성 · 운영(민 · 관 · 소방노조 합동)**으로 과학적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과제 · 대책** 수립**(5건/'23~현재)** * ❶ 단독주택 화재현장 순직, ❷ 밀폐공간 가스중독 대원안전사고, ❸ 교차로 구급차 교통사고, ❹ 감귤창고 화재 처마 붕괴 순직, ❺ 식품가공 공장화재 급격한 연소확대 2명 순직 · **(원인규명 재현실험 협업)** 식용유 화재성상 비교, 퇴김기 내 잔존 식용유와 튀김가루 발화 여부 **재현실험** 및 사고현장 **3차원 스캔 등** 원인분석을 위한 **연구기관(국립소방연구원)과 협업** · **(안전관리 규정 개정)** 현장안전점검관 배치 · 겸임 금지, 신속동료구조팀 편성 · 운영 등 **주요 6개 조항 개정** · **(실무교육콘텐츠 개발)** 현장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 및 신임자 등 직접 활용 가능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무**' **교육 도구(PPT 1,200장) 개발 · 배포**로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교육 활성화 · **(전국 순회교육)** 전국 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 등 대상 최근 화재현장 순직사고 조사 · 분석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등 **직접 순회교육** ※'24년 4~6월 / 전국 총 10회 / 현장지휘관 등 1,123명 · **(사고조사팀 운영 및 사고사례 전파 활성화)** 중앙에서 시 · 도

		소방본부(소방관서)로의 일방적·수직적 안전관리 한계 극복, 소방서 단위 능동적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중앙의 탑다운 방식을 벗어나 **자체 사고조사팀 운영** 및 **사고사례 전파 활성화** · **(국정과제 ☞ 찾아가는 현장안전 실태점검) 여름철 대비 소방활동(폭염, 풍수해, 수난구조, 벌집제거 활동 등) 안전관리·특별점검 계획 수립** 및 **기간(6~8월) 중 합동특별 표본점검 완료** (6. 11. ~ 6. 21 / 기간 중 4일 / 5개 소방관서) 추진 · **(시기·유형별 집중 안전관리) 폭염기간 안전관리 집중 강화기간('24.7. 24. ~ 8. 31. / 39일간)** 추진, 집중호우 대원안전관리 재강조('24.7.10.), **겨울철·한파특보** 빙판길 미끄러짐 및 교통사고 안전관리 재강조 알림('23.11.21./12.20.), 화재현장 **화상사고 방지** 재강조('23.9.5./11.20.), **벌집제거활동** 안전수칙 재강조('23.10.12.), 화재현장 **개인보호장비 완착** 재강조('24.1.5.) 등 **사고현장 위험성평가 기준 가이드라인** 권고 · **(안전의식 강화)** 현장 안전관리 실천강화를 위한 "**현장 안전관리 슬로건**"을 공모하여 전국 현장활용, 안전의식 강화 견인 · **(안전 관련 연구 협업)** 국립소방연구원 등과 협업 '**신속동료구조팀 효율적 편성·운영**' 및 '**수난구조활동 위험성평가**' 실증 방안 등 안전정책 연구 추진 * ❶ **(정책반영)** 현장대원 순직사고 저감 신속동료구조팀 효율적 편성·운영 방안 연구, ❷ **(기준개발)** 수난구조환경·구조대원 위험도 분석을 통한 활동지침 위험성평가 기준개발 · **(소방차 운행기록장치)** 소방차의 안전한 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행기록장치*** 제때 장착으로 교통사고 저감체계 및 근거 마련 * 자동차 변속기, 속도기 이용 운행기록, 운행경로, 운전자행동 등 운행정보 수집 ·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협업)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여 소방청 자체 교통안전분석시스템 구축 전 **정보화전략계획(ISP)** 연구용역 추진 및 **운행기록분석시스템 공동활용**을 통해 소방차 교통사고 저감 추진 · **(대국민 언론홍보)** 최근 3년간 소방차 교통사고 절반 이상이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비율을 줄이고자 "**교차로 사각지대 소방차량 주의 당부**" 관련 언론홍보를 통해 대국민 행동요령을 당부 · **(체력증진 프로그램)** 전국 소방공무원 **체력증진프로그램(비대면, 소방체전) 추진**으로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효과[13] 및 미담사례[14]	· **(종합계획)** 전국 235개소 소방관서 '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적극 이행으로 집중관리 대상 '**떨어짐(추락)**' **63% 감소**, '**교차**

로 교통사고' 25% 감소 및 온열환자 '0' 성과 달성

· **(사고조사단)** 순직·안전사고에 대한 **과학적 원인규명** 및 분야별 **재발방지대책*** 마련·시행, 대국민 언론브리핑, 교육자료 배포 및 전국 재발방지 **순회교육(현장지휘관 등 총 10회 1,123명)** 등 추진

* ❶ 단독주택 순직(13개 과제), ❷ 밀폐공간 가스중독(5개 과제), ❸ 교차로 구급차 교통사고(8개 과제), ❹ 창고화재 붕괴(9개 과제), ❺ 식품가공 공장화재(18개 과제)

· **(안전관리 규정)** 현장 안전관리 실행력 강화와 현장안전점검관의 전문성·독립성 확보로 **안전관리체계의 제도적 기반 강화**

· **(사고사례 전파 및 사고조사팀 운영) 총 170건** 활성화 추진

· **(안전실무 교육 강화)** 전국 **25,539명**(현장안전점검관[867명] 및 신임대원[24,672명]이 '현장 안전관리 실무해설서'를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 및 사이버콘텐츠 교육을 **100% 이수**함으로써 현장 순직사고 감소에 기여

· **(집중강화) 폭염강화기간** 추진으로 현장대원 **온열환자 Zero화**

· **(안전의식)** 현장 안전관리 슬로건* 공모 결과 **1,244점 접수**, 최종 **4점 선정**하여 전국 현장활용 안전의식 강화 견인

* "현장 안전, 우리가 모두 점검관입니다" 등 **공문서, 홍보물품 등 제작 활용**

· **(안전 관련 연구 협업)** 실험적 근거가 없는 기존 **'수상구조활동 위험평가표'**를 정책부서 ↔ 연구기관 ↔ 현장대원과 협업 실증을 통해 **과학적 기준 재정립**

· **(운행기록장치)** 전국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제때 장착으로 **12종 7,506대 운행기록장치 장착 완료**('24. 4. 26.기준)

· **(대국민 언론홍보)** "**교차로 사각지대 소방차량 주의 당부**" 관련 언론홍보를 통해 대국민 행동요령을 당부하여 교통사고 저감에 기여

⇨ **적극적 현장안전 정책 수행과 현장소통을 통해 최근 10년간 연평균 4.2명 위험직무순직에 비해 2023년 순직사고 52%(약 2명) 감소로 사회적가치 7,400억 상당 창출**

※ **소방대원 위험직무순직 1명 감소 시 사회적 가치 3,700억* 발생**

*** 사회적 가치 B/C분석 결과(참고): 순편익(3,700억) = 편익(3,720억) - 비용(20억)**

사례번호 ④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적극행정 우수사례(2)

<table>
<tr><td rowspan="2">사례제목[1]
(정책명[2])</td><td colspan="6">마음이 건강한 소방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td></tr>
<tr><td colspan="6">‘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td></tr>
<tr><td>사례요약[3]</td><td colspan="6">각종 재난현장에서 24시간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은 지속적으로 참혹한 현장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예방과 치유를 위해 소방청에서는 다양한 ‘마음건강 보건안전지원 사업’을 운영 중임.

특히,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개선을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인력이 포함된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운영으로 적극적인 심리안정 및 치유 추진
► 최근 5년간(‘14~‘23년) 소방공무원 극단적 선택에 의한 자살 총 75명
► ‘23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고위험군(PTSD, 우울, 음주, 수면) 총 23,060명 / 43.9%</td></tr>
<tr><td colspan="2">기관명[4]
(부서명)</td><td colspan="6">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td></tr>
<tr><td rowspan="2">분야[5]</td><td>1차</td><td colspan="6">규제혁신 여부 Y ☐ N ■</td></tr>
<tr><td>2차</td><td colspan="6">역동적 경제 ☐ 살기좋은 대한민국 ■ 담대한 미래 ☐ 따뜻한 동행 ☐
기타 ☐ (직접입력 :)</td></tr>
<tr><td colspan="2" rowspan="4">공적자[6]</td><td>구분</td><td>부서명</td><td>직급</td><td>성명</td><td>연락처</td></tr>
<tr><td>주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
<tr><td>부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
<tr><td>부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각종대회 수상실적[7]</td><td colspan="6">없음</td></tr>
<tr><td colspan="2">가점대상 여부[8]
(입증자료 필수)</td><td colspan="6">국민추천사례(+3점) ☐ 사회적 재난 대응(+3점) ☐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3점) ☐ 협업사례(+3점) ☐
※ 과제명
※ 협업기관명 모두 기재(공동출품기관만 인정, 민간 및 산하·소속기관은 기재하지 말 것)</td></tr>
<tr><td colspan="2">기타 해당 여부[9]</td><td colspan="6">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사례 ☐
※ 종류 및 일자
위원회 0회(22.05.20), 사전 컨설팅 0회
기관 중점 추진과제 ■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td></tr>
<tr><td rowspan="2">사례내용</td><td>상황[10]</td><td colspan="6">○(자살발생 지속) 개인의 다양한 사회·심리적 요인이 우울증 등으로 집약되고 참혹한 외상사건 경험 등 직업적 특성이 더해져 자살 증가*


* ‘21년 최초로 10만명 당 자살 발생률이 일반국민을 넘어선 이후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며 유사직군 경찰과는 큰 격차를 보임</td></tr>
</table>



○**(마음건강 악화)**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기' 이후 **PTSD, 우울 등에 대한 고위험군 급격히 증가**

스트레스 요인	PTSD		우울증		수면장애		문제성음주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2020	2,666	**5.1**	2,028	**3.9**	12,127	**23.3**	15,618	**29.9**
2021	3,093	**5.7**	2,379	**4.4**	12,310	**22.8**	12,271	**22.7**
2022	4,364	**8.1**	4,129	**7.6**	16,108	**29.8**	14,149	**26.2**

○**(정신질환 공상승인)** 공상 신청은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결정**되며 **가장 신뢰성 있는 기준**이므로 승인자 대상 **적극적 심리지원·관리 필요**

※ '21~'22년 간 정신질환 관련 공무상 요양 승인 **52명(승인율 86.7%)**

☞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바탕으로 **적극적 대응조직** 도입
⇨ **'소방심리지원단' 운영을 통한 심리치유와 정책·사업을 결합**

- 高위험군 **집중상담**/현장 **긴급 심리지원**
- 정신건강 증진 · 자살예방 대책 등 추진
- 마음건강 **보건안전지원 사업 등의 관리**

심리 지원단

- **(상담)** 찾아가는 상담실
- **(치유)**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 **(진료)** 마음건강상담 · 검사 · 진료비 지원

난관[11]

○**(운영기준 미비) 일부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대응조직 운영

▸ **경기북부 본부 :** 소방본부 직속 '**소방동료상담소(소담센터)**' 운영
- 운영장소 : 소담센터(남양주시-내방), 소방서·소방학교(방문) 등
- 인원/예산 : 총 6명(센터장 1, 상담사 5)

동료상담			예방교육		심신건강관리프로그램		합계
긴급심리 지원	개인·집단	외부기관 연계	PTSD	자살	심신이완 향테라피	자연치유 아색클래스	
166	2,367	20	1,193	455	1,145	764	6,110

▸ **전남 본부 :** 담당 소방관서 별 **'심리상담팀(동료상담사)'** 분산 배치
- 운영장소 : 소방본부·소방학교 및 20개 소방서
- 운영인원 : 총 14명(팀장 1 - 본부, 상담사 13 – 담당지역 배치)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가족상담	외상사건 상담	재난지원 상담	교육	합계
653	1,280	2,875	42	41	53	1,740	6,684

⇨ 상담·교육 중심의 운영으로 **'마음건강 보건안전지원 사업'과 연관성 결여**, 정책기능 부재로 **적극 개입조치·능동적 대책 추진 제한**

○**(전문인력 부족)** 심리지원에 관한 경력·전문지식을 갖춘 소방공무원(동료상담사)*이 **일부 시·도에 한정되고, 체계적·적극적 대응 곤란**

* '24년 기준 총 33명 : 부산 6, 울산 1, 경기 10, 전남 13, 경북 2, 제주 1

		○**(법적근거 미비)** 효과적 심리안정과 치료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소방심리지원단'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및 심사***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이형석·김민철 의원('20.11.4) /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21.2.18) ⇨ 입법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설치 필요성 설득 부족, **추후 논의**
	적극[12]	○**(운영기반 조성)** 법안 소위에서 논의된 **쟁점사항을 적극 수용**, 예산·조직 확대없이 **시·도 자율적 판단에 의한 '소방심리지원단' 도입 유도** ❶ **'제2차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소방심리지원단 포함**(`20.12.8)** *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관련 법정계획**(대통령 재가)** ❷ **'극단적 선택 예방·방지 대책'** 수립 시 운영기준 제시**(`22.8.11)** ⇨ 소방심리지원단의 **목적, 구성 및 임무에 대한 원칙 규정** ❸ **'소방본부 심리지원단 운영 방안'** 수립**(`23.2.20)** ⇨ 소방심리지원단 편성과 설계, 제도적 추진 방향 설정 ❹**「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훈령)」개정**, 근거 조항 포함**(`23.4.15)** ⇨ 심리지원 및 정책 수립·시행, 사업 운영에 대한 조항 신설 ❺ **'소방본부 심리지원단 운영지침'** 알림 및 시행**(`23.5.4)** ⇨ 총칙, 설치·편성, 운영 및 제도적 지원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 마련 ☞ **(성과) '23년말 전국 9개 소방본부*에서 '소방심리지원단' 운영** * 부산,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제주 ○**(전문인력 확보)** 소방의 직무특성·조직문화를 이해하며 지식과 능력을 갖춘 **'동료상담사'** 활용, **심리치유 및 정책·사업 수행** ⇨ **'소방전문상담' 대학원 과정 개설을 통한 자체양성** 추진(신규채용 병행) ❶ **소방청-한국상담학회 업무협약** 체결**(`23.3.28)** ⇨ **공인된 '동료상담사' 양성**을 위한 학위·자격증 취득 방안 협의 ❷ **'소방전문상담' 대학원 과정 운영방안** 수립**(`23.6.21)** ⇨ 소방공무원 **수요조사 / 도입목적, 운영 특성 및 추진방향 등** ❸ **'소방전문상담' 대학원 과정 위탁교육 의뢰 및 협의(`23.6~8월)** ⇨ **소방청-김천대학교** 실무자 간 세부 교육과정 논의 및 조정 ❹ `24년 1학기 '소방전문상담' 학과 **신입생 선발 및 추천(`23.9~12월)**  ❺ 소방청-김천대학교 간 **'대학원 과정 설치·운영계약' 체결(`23.12월)** ❻ 김천대학교 '소방전문상담 석사과정' **제1기 14명 입학(`23.3.9)** ☞ **(활용) 학위 및 자격 취득 후 소방심리지원단 배치** 또는 시·도별 설치된 심리지원 부서의 **'동료상담사'로 근무** ※ '26년 하반기 14명 졸업 예정, 현재 '25년 신입생(제2기) 선발 중 ○**(법령개정 추진)** 국회·관계기관 등에서 '심리지원단' 필요성 인정, **인사·조직·예산 권한을 가진 시·도 설득을 위해 법률적 근거 필수**

❶ 개정법안 재상정을 위한 의원실(이형석 의원) 업무협의(`23.9월)

❷ 국회 행안위 **법안2소위(`23.12.4), 전체회의(`23.12.8)** 법안 심사 및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24.1.24)** 법안 심사 ⇨ 가결

※ '21년 법안소위 시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과 정책적 추진 사항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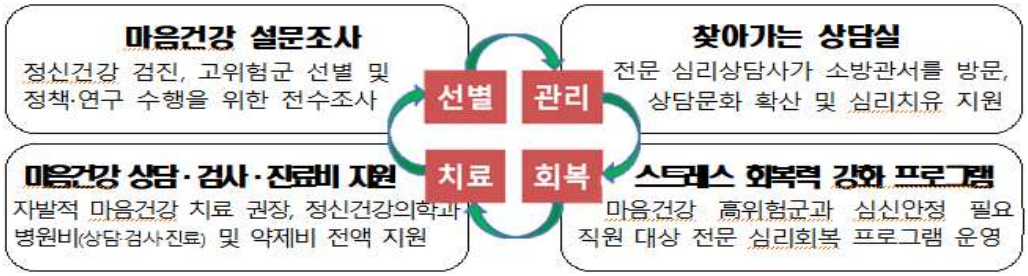
- ▸ 기존 심리지원 사업과 **중복성 및 인력·예산 등 국가재정에 미칠 영향**
- ▸ 사업 중복, **효과성 및 비용 절감효과에 대한 기존 체계화의 비교분석**
- ▸ 소방심리지원단 설치는 내부적인 사항에 불과, 직제사항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 대통령령 또는 **시책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❸ 국회 본회의 통과(`24.1.25) 및 공포(`24.2.13), 시행(`24.8.14)

❹ 시행령 개정(현재 차관회의 의결) 및 **소방청 행정규칙 반영** 추진 중

○**(사업예산 증액)**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에 따른 PTSD, 우울증 등 심리적 문제를 **선별·관리하고 회복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운영

※ '22년 3,317백만원 → **'23년 3,678백만원 / 10.9% 증가**



효과[13] 및 미담사례[14]

○**(마음건강 개선)** '소방심리지원단' 운영지침에 따른 심리치유 및 정책·사업의 수행 결과 **`23년 PTSD, 우울증 등 유병률 감소세로 전환**

스트레스 요인	PTSD		우울증		수면장애		문제성음주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2022년	4,364	8.1	4,129	7.6	16,108	29.8	14,149	26.2
2023년	**3,433 (21.3%↓)**	**6.5**	**3,327 (19.4%↓)**	**6.3**	**14,362 (10.8%↓)**	**27.2**	**13,940 (1.5%↓)**	**26.4**

※ '자살' 위험군 '22년 2,906명에서 '23년 2,588명으로 10.9% 감소

○**(자살발생 감소)** 극단적 선택 **`22년 대비 47.6% 급감**(21명 → 11명)

○**(우수 사업평가)** `22~`23년 연속 **재난안전사업 평가 '우수' 등급** 및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예산안 사전협의 '가' 등급** 평가 ⇨ 소방청 유일

- 소방청 재난안전사업 자체평가에 의한 사업별 예산집행률, 제도개선 및 성과우수성 평가 결과 **2년 연속('22~'23년) 1순위** 획득

연도	2022년	2023년
1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93.8점 / 우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96.9점 / 우수)**

- 투자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예산안 사전협의 결과 **투자확대 등급인 '가' 등급 및 '핵심' 사업**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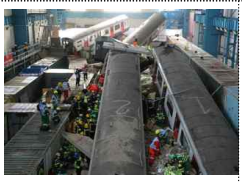
사례번호 ⑤

소방청 대응총괄과
적극행정 우수사례(1)

<table>
<tr><td colspan="2">사례제목[1]
(정책명[2])</td><td colspan="6">철거되는 건물에서 국민의 안전이 싹튼다.
(「소방청·한국토지주택공사 협업」재난대응 훈련장소 확보·활용 방안)</td></tr>
<tr><td colspan="2">사례요약[3]</td><td colspan="6">소방청-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업해 재건축 및 재개발 건축물 철거 전 훈련장소로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재난현장과 유사한 현장경험 축적 및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 하는 등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 사례</td></tr>
<tr><td colspan="2">기관명[4]
(부서명)</td><td colspan="6">소방청
(대응총괄과)</td></tr>
<tr><td rowspan="2">분야[5]</td><td>1차</td><td colspan="6">규제혁신 여부 Y ☐ N ☑</td></tr>
<tr><td>2차</td><td colspan="6">역동적 경제 ☐ 살기좋은 대한민국 ☑ 담대한 미래 ☐ 따뜻한 동행 ☐
기타 ☐ (직접입력 :)</td></tr>
<tr><td colspan="2" rowspan="4">공적자[6]</td><td>구분</td><td>부서명</td><td>직급</td><td>성명</td><td colspan="2">연락처</td></tr>
<tr><td>주 공적자</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부 공적자</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부 공적자</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각종대회 수상실적[7]</td><td colspan="6">해당사항 없음</td></tr>
<tr><td colspan="2">가점대상 여부[8]
(입증자료 필수)</td><td colspan="3">국민추천사례(+3점) ☐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3점) ☐</td><td colspan="3">사회적 재난 대응(+3점) ☐
협업사례(+3점) ☑ (한국토지주택공사)</td></tr>
<tr><td colspan="2">기타 해당 여부[9]</td><td colspan="3">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사례 ☐</td><td colspan="3">기관 중점 추진과제 ☑
※2024년 소방청 주요업무 추진계획(대응총괄과 2번 과제)</td></tr>
<tr><td rowspan="2">사례내용</td><td>상황[10]</td><td colspan="6">○ (인력변화)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 소방교·사 비율 증가*
* 전국 소방공무원 66,659명 중 소방교·사66.4%(소방교16,584명, 소방사 27,683명)
○ (과정부족) 화재진압훈련 및 팀 단위 전술훈련 등 현장중심 교육과정 부족
※ 코로나19로 인한 소방학교 교육훈련 중단·부분 운영('20~'23)에 따라 최근 임용된 소방공무원(소방교·사) 경험 부족 → 재난대응 역량 저하 우려
○ (역량강화) 시·도별 재난대응 역량강화 위한 실제 훈련지역 확보 필요
※ 재난현장 대응활동 현장의견 토론회 중 실제 훈련 필요성 등 다수 사도 의견 제시('24.2.7)
○ (재난강도) 2017년부터 화재발생 건수 감소, 대형화재 발생건수 증가

<table>
<tr><th>구 분</th><th>2017년</th><th>2018년</th><th>2019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r>
<tr><td>화재 발생현황</td><td>44,178</td><td>42,338</td><td>40,103</td><td>38,659</td><td>36,267</td><td>40,113</td></tr>
<tr><td>대형화재 발생현황</td><td>9 (0.02%)</td><td>15 (0.03%)</td><td>18 (0.04%)</td><td>18 (0.04%)</td><td>15 (0.04%)</td><td>35 (0.1%)</td></tr>
</table>

※ 2017년 ~ 2021년까지 화재발생 건수는 감소되었으나, 2022년 전년대비 10.6%(3,846건) 증가, 대형화재 발생 건수는 133%(20건)증가
○ (학교활용 불가) 전국 소방학교 9개소 운영중이나, 연중 교육과정 운영으로 소방학교 미입교 대원 훈련 · 교육시설 상시활용 불가</td></tr>
</table>

	난관[11]	○ **(장소확보)** 국가직 전화 후 시도별 자체훈련(총238회) 시행 중이나, 훈련장소 확보에 어려움 발생 ⇒ 협의주체 및 요구사항 다양 등 ○ **(협의주체 다양)** 지역주택조합, 민간건설사 등 다양한 협의 주체로 인하여 협의기간 및 과정 복잡, 훈련 진행 시 제약* 발생 * 재개발 일정에 따른 훈련 진행 변동, 일부 거주 주민들의 민원 등 ○ **(소멸성 협약체결)** 지역주택조합 대상 업무협약 체결 후 지역주택 일원 재개발 공사 진행 시 업무협약(훈련장소 지원)에 대한 사항 효력 상실 ○ **(해외사례)** 해외 다수 국가 철거예정 건물 활용, 실전위주 훈련 시행  < 미국 >  < 영국 >  < 프랑스 >  < 일본 >
	적극[12]	○ **(기관협업)** 소방청·한국토지주택공사 협업 소방공무원 재난대응 훈련 장소 확보·활용 방안 마련('24.4.17) ❶ **(실전훈련)** 화재진압·인명구조·다수사상자 대응 등 필요훈련 시행 

❷ (화재조사 및 소방연구)

- **(재연실험)** 건물구조 등 현장상황에 따른 화재패턴 생성 실증실험
  ※ 아파트 화재 연소확대 경로 및 연기유동 경로 실험, 주요 인명피해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피해저감 대책 마련 자료로 활용
- **(현장실습)** 발굴·복원·증거물 수집 방법 등 화재조사관 전문능력 배양
- **(실증실험)** 소방장비 및 R&D연구 성과물 등 실증실험 진행 장소활용


화재진압훈련


인명구조훈련


문개방훈련


재연실험·조사

○ (업무협약) 소방청-LH 간 재난대응 협력 업무협약 체결('24.4.29)

- **(일시/장소)** '24. 4. 29.(월) 10:50 / 한국토지주택공사 회의실
- **(협력사항)**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재개발·재건축 및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소규모주택 정비 등 정비사업 지역을 소방기관 훈련 장소로 활용

② 정비사업 지역 내 소방기관의 소방안전교육 시행과 훈련종료 시 안전순찰 실시 및 철거·공사 중 사고 시 적극 대응



○ (절차마련) 소방청-LH 간 훈련장소 활용절차 실무협의회 개최('24.5.8)

① **(제공방안)** 활용 가능 대상지는 LH본사 ↔ LH지역본부 협의 후 분기별 제공
※ 재개발지역 건물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콘크리트 등)에 대해 소방훈련 기자재 활용

② **(사용절차)** 시·도 소방본부의 행정적 부담 저감을 위해 절차 최소화

③ **(사후관리)** 신고체계, 정보공유, 연락체계, 소방안전교육 등 기관 간 신속대응체계 마련

④ **(기타사항)** 훈련 진행 시 인근 학교, 주민 등에 충분한 안내 및 협조 요청 당부

○ (정책설명회) 소방공무원 재난대응 훈련장소 활용방안 설명회('24.5.28)

- **(일시/장소)** '24. 5. 28.(화) 14:00 / 소방청 소강당 205호
- **(주요내용)**

① 소방공무원 재난대응 훈련장소(정비사업 구역) 확보·활용방안 등
↳ 추진배경, 훈련장소 제공방법 · 사용절차 · 사후관리 · 공동활용 방안

② 실전 훈련 시 안전관리 대책 및 이행, 피해보상 방안

③ 시 · 도 협조사항 안내(훈련 홍보, 소방안전교육, 화재예방순찰 등)



○ (소방훈련) 대전소방본부 실제 소방훈련 시행('24.6)

순번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비고
1	2024.5.30.(목)	대동2지구 환경개선사업지구	화재진압 인명구조 (90명/24대)	도상훈련
2	2024.6.5.(수)			실제훈련
3	2024.6.7.(금)			
4	2024.6.12.(수)			

화재현장에서 시민을 구하는 소방

입력 2024.06.12. 오후 3:49 수정 2024.06.12. 오후 3:50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12일 대전 동구 용운동 재개발지역에서 실시된 실화재 진압훈련에서 동부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화재 진행 단계별 화염과 열·연기의 움직임을 직접 관찰, 화재진압 방법을 익히고 소방대원의 상황별 화재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6.12/뉴스1



		○ **(공동활용)** 전국 소방기관 공동활용체계 구축완료('24.6.20) - 정비사업구역 훈련장소 확보 시 인접 시·도 공동활용체계 마련, 해당 시·도 및 인접 시·도 균등한 소방대응 역량 강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정비사업 구역을 인접 시·도 등 소방기관과 함께 소방공무원 재난대응 훈련장소로 공동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전국18개시·도 동의(제주제외)
	효과[13] 및 미담사례[14]	○ **(추진성과)** 실제 재난현장 유사 훈련장소 안정적 확보에 따른 재난대응역량 강화 및 예산절감 등 소방행정 업무성과 달성 - **(실전훈련)** 현장활동 대원 실전 훈련 가능 및 재난대응 경험축적 ※ 출동에서부터 현장대응 및 귀소에 이르는 전체적인 대응작전 수립·시행 **【 대전소방본부 정비사업구역 대상 소방훈련 결과 】** - **(일시/장소)** '24.6.7(금) 14:00 / 대전 대동2지구 일원 - **(훈련내용)** 최초 가상화재 메시지 부여 후 팀 단위별 무각본 훈련 ※ 출동 지령 후 출동로 선정, 소요시간, 차량부서 등 적정 여부 확인 - **(훈련결과)** 활동 종료 후 팀별 디브리핑 및 토론을 통한 효율적인 현장대응방법 강구  - **(예산절감)** 실화재훈련·재현실험·구조훈련 시 필요 재료 미 구입에 따른 소방 훈련 예산절감 효과 예상 **《 재개발지역 소방활용에 따른 예산절감액(예상) 》** ❶ **재현실험 시 컨테이너 구입 비용** : **300만원**(3m*3m) / 실내실험장소 임차비 : **700만원**(일당) ❷ **인명구조 훈련 위한 훈련장 조성 비용** : **평균2,000만원** * 개별단가 : 파괴구조물(80만원), 방화문도어락(20만원), 컨테이너(400만원), 인조바위(250만원) - 소방청.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업무협약 통한 시·도(소방본부) 행정업무 간소화 ○ **(미담사례)** 대전소방본부 실화재 훈련 참여자 의견 - 건축물 사고의 대형화로 인한 훈련 및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데 실제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서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든다. - 그렇다고 철거 전 건물을 훈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조합 등 협의할 내용도 많고 원활한 훈련을 하기 힘든 실정에서, 관계기관이 협업해 훈련장을 확보해서 직원들이 실제 현장과 같은 환경에서 훈련과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 대원들이 실제 현장을 가정해 고층을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진입하는 훈련을 하고, 다양한 현장상황을 묘사해 전술적인 진압훈련 등을 할 수 있으며, 현장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한 층 더 안전한 현장활동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사례번호 ⑥

소방청 대응총괄과
적극행정 우수사례(2)

<table>
<tr><td colspan="2">사례제목[1]

(정책명[2])</td><td colspan="6">건축물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

「소방청·국토안전관리원 협업」건축물사고 현장안전실무 교육과정 운영)</td></tr>
<tr><td colspan="2">사례요약[3]</td><td colspan="6">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 전문가는 소방공무원 우리 자신이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전제조건은 현장안전 확보가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건축물 사고 발생 시 관계기간 도착 전 현장활동 대원의 건물 안전점검과 위험성 평가 등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과정 기획·운영</td></tr>
<tr><td colspan="2">기관명[4]
(부서명)</td><td colspan="6">소방청
(대응총괄과)</td></tr>
<tr><td rowspan="2">분야[5]</td><td>1차</td><td colspan="6">규제혁신 여부 Y ☐ N ☑</td></tr>
<tr><td>2차</td><td colspan="6">역동적 경제 ☐ 살기좋은 대한민국 ☑ 담대한 미래 ☐ 따뜻한 동행 ☐
기타 ☐ (직접입력 :)</td></tr>
<tr><td colspan="2" rowspan="4">공적자[6]</td><td>구분</td><td>부서명</td><td>직급</td><td>성명</td><td colspan="2">연락처</td></tr>
<tr><td>주 공적자</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부 공적자</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부 공적자</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각종대회 수상실적[7]</td><td colspan="6">해당사항 없음</td></tr>
<tr><td colspan="2">가점대상 여부[8]
(입증자료 필수)</td><td colspan="3">국민추천사례(+3점) ☐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3점) ☐</td><td colspan="3">사회적 재난 대응(+3점) ☐
협업사례(+3점) ☑ (국토안전관리원)</td></tr>
<tr><td colspan="2">기타 해당 여부[9]</td><td colspan="3">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사례 ☐</td><td colspan="3">기관 중점 추진과제 ☑
※2024년 소방청 주요업무 추진계획(대응총괄과 9번 과제)</td></tr>
<tr><td rowspan="2">사례내용</td><td>상황[10]</td><td colspan="6">○ (현장안전) 자연재해(지진·태풍) 및 소규모 건축물 안전사고, 건축물 철거 중 붕괴사고 등 건축물 사고현장 안전 중요성 해마다 증가

< 교량붕괴 > < 지반침하 > < 철거 중 붕괴 > < 공사 중 붕괴 >
▌최근3년간('20~'22) 붕괴사고 출동건수는 평균 1,813건으로 주택(공동·단독포함)·공사장·교량에서 발생한 사고의 출동 비율은 약 37.3%차지(676건)
○ (사고증가) 복잡한 건물구조, 예측 불가능한 위험상황 발생 등 안전사고 지속 발생
※건축구조물 내 순직현황 : 12명(건축구조물 고립붕괴 등 9, 지하 폭발 및 고립 2, 교량 케이블 낙하 1)
○ (역량강화) 건축물 사고 등 재난현장 출동 시 관계기관 도착 전 현장활동 대원 건물 안전점검 및 위험성 평가 등 전문능력 배양 필요
※ 현장활동 전문가는 우리 자신이나 원활한 활동 위한 전제조건은 현장안전 확보</td></tr>
</table>

	난관[11]	○ **(교육부재)** 건축물 사고현장 위험성 평가 및 현장활동 대원 안전 점검 위해 자체 현장안전점검관 운영중이나 전문교육 과정 부재 - 높은 불확실성과 낮은 예측 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현장은 2차사고 위험성이 있어, 현장안전을 위한 사전예방 및 전문교육 필요
	적극[12]	○ **(시범교육)** 건축물사고 현장안전실무 교육과정 시범운영('23.11.15) - **(기간/장소)** 2023. 11. 15(수) ~ 11. 16(목), 2일간 / 광주소방학교 대회의실 - **(교육대상)** 82명(호남권 소방공무원) - **(교육내용)** 건축물사고 현장활동에 필요한 안전실무 역량 강화 등 **< 소방공무원 건축물사고 현장안전실무 교육 만족도 조사결과(요약) >** ◇ **(참여인원)** 중구본 · 광주 · 전남 · 전북 교육참여 **소방공무원 82명 전원** 참여 - (계급비율) 령2, 경5, 위41, 교20, 사14 / (근무경력) 10년미만 34, 10~20년미만 29, 20년이상 19 ◇ **(조사결과) 교육내용이 유익하고 현장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약 83%(68명)가 응답**하였으나, **난이도 경우, 계급 및 근무경력 관계없이 어렵다는 의견이 약34%(28명)로 나타남**  < 사고조사 사례공유 >  <건축물 및 교량 안전점검>  < 소방청 대응기획계장 주관 질의응답 >  ◇ **(향후계획) 사고사례 중심, 건축전문가 입장의 현장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 등 설명 필요** ▸ 건축물·교량·터널 등 건축용어·관계법령 설명 등, 현장대원 관점에서 교육자료 개선 필요 ○ **(사전준비)** 소방공무원 재난대응 역량강화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24.2.21) - **(일시/장소)** '24. 2. 21.(수) 13:00 / 국토안전관리원(경남진주) - **(회의결과)** ① 건축물사고 현장안전실무 교육과정·시간·수준 및 일정 등 운영사항 협의 ※ 이론 위주 강의식 교육 → 사례 중점 토의식 교육(현장대원 눈높이 맞춤형 교육 추진 ② 건축물 재료·구조 및 폭발·붕괴 징후에 대한 강의 및 자료위주 준비 ※ 재난현장 대응활동 의견수렴 토론회 시 요청('24.2.7 / 부산·충남·광주·연구원 등) ③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 협업을 위한 협조절차 간소화 논의(핫라인 개설)  ○ **(연락체계 단순화)** 건축물사고 대응 비상연락체계 개선사항 마련('24.2.22) **❶ 건축물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단순화** **현재(5단계)**: 소방본부 → 소방청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국토안전관리원 ⇒ **앞으로(핫라인)**: **소방청 · 소방본부 → 국토안전관리원**

❷ 각 시·도 소방본부, 권역별 지역본부 사업지원실 간 협업체계 구축

구분	국토안전관리원 지역본부(사업지원실)	연락처	해당 소방본부
1	수도권 지역본부	031-910-4102	서울·인천·경기서부*
2	강원권 지역본부	033-259-5311	강원·경기동부**
3	충청권 지역본부	043-640-5466	대전·세종·충북·충남
4	영남권 지역본부	054-440-5611	부산·경남·경북·울산·대구
5	호남권 지역본부	062-603-5803	광주·전북·전남·제주

❸ 재난발생 시 정보공유체계 강화(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 재난안전통신망 참여)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 재난안전통신망(소방지역명지통단01) 채널 입장 요청

※ 국토안전관리원 및 각 지역본부별 재난안전통신망 2대씩 보유중

○ **(교육운영)** 소방공무원 건축물사고 현장안전실무 교육과정 운영('24.4.~6)

- **(교육주관) 소방청 대응총괄과·국토안전관리원**
- **(일시/장소)** '24년 4 ~ 6월 중 전국 8개소 1일(8시간) 교육 진행
- **(교육대상)** 총 779명(소방서별 현장지휘 . 현장안전점검관, 구조대 팀장 각 1명)

구분	광주학교	서울학교	경기학교	강원진흥원	여수컨벤션	대구EXCO	부산학교	중앙학교
일시	4.2	4.4	4.5	5.3	5.10	5.24	5.31	6.13
인원	78	111	122	57	68	105	119	119

- **(교육내용)** 현장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질의 및 답변 등 사례중심 토론 교육 실시
  -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상황인식, 의사결정 및 시스템 운영 등 지휘와 안전관리의 중점사항 등
  - ▸**(순직사고 재발방지)** 문경·제주 순직사고 조사결과 및 재발방지 추진대책 공유 등
  - ▸**(건축구조(재료) 및 붕괴)** 건축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 등) 및 재료의 공학적 성질 등
  - ▸**(지반침하 위험요소)** 지반침하의 주요원인 및 사고 사례 중심 안전관리 방안
  - ▸**(건축물 사고 사례공유)** 건설·지하·시설물·건축무루 주요 사고사례 및 대응방안

○ **(개선·보완)** 광주· 서울· 경기 등 3개소 교육과정 운영결과 공유 및 교육과정 개선사항, 미비점 보완 위한 영상회의 개최('24.4.11)

- **(일시/방법)** '24. 4. 11.(목) 10:00 / 영상회의(zoom)
- **(참여인원)** 7명(소방청3, 국토안전관리원3)
- **(주요내용)**

① 서울·경기·광주 3개소 교육과정 운영결과 공유(311명 교육완료 / 만족도76%)

② 교육생 의견 공유 및 교육과정 개선사항·보완사항 마련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위주로 교안 보완· 재편성



○ **(교육결과)** 붕괴사고 및 지하사고 현장 출동 시 관계기관 도착 전 현장활동 대원 건물 안전점검 및 위험성 평가 등 전문역량 강화 기여

※ 교육참여자 대상(779명 중 737명94.6% 참여) 설문조사 결과, 교육만족도 81%

《 건축물사고 현장안전실무 교육 설문조사 요약 》

참여자 현황	❶ 계급 : 소방령47(6%), **소방경281(38%), 소방위348(47%)**, 소방장이하61(9%)	
	❷ 경력 : **20년이상474(64%)**, 15~19년139(19%), 10~14년91(12%), 9년미만33(4%)	
	❸ 업무 : 현장대응단장[팀장]236(32%), 현장안전점검관227(31%), 구조대 팀장 등274(37%)	
만족도	❶ 안전관리 : 82% ❷ 지반침하 : 78% ❸ 건축구조 : 80% ❹ 사고사례 : 82%	
교육생 의견	좋은 점	◦**소방에 관계되는 사고사례 위주**로 하니 **유익함.** ◦교육이 **전반적으로 사례 위주로 쉽게 강의**해줘서 **매우 도움**이 됨. ◦**현장지휘관, 안전담당 모두 교육** 받으면 좋겠음. ◦이번 교육과정이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었으면 좋겠음.
	개선 사항	◦**건축구조 및 재료특성을 더 세분화** 했으면 좋겠음. ◦이번 교육은 현장안전담당 등 교육으로 화재 시 건축물 붕괴 등 관련하여 현장과 연결시켜 교육하면 도움이 더 될꺼 같다고 생각함.
	건의 사항	◦**KDRT대상으로 확대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해주면 좋겠다. KDRT출동은 대부분 지진에 따른 구조출동**으로 이번 **건축물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됨 ◦**위험물사고 대응 실무 교육도 필요함.** ◦현장대원 간 **현장소통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이 필요함.

효과[13] 및 미담사례[14]

○ **(연락체계 개선)** 건축물 사고로 인한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현장 안전 점검으로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해 고립된 국민의 생명 수호

○ **(교육결과)** 붕괴사고 및 지하사고 현장 출동 시 관계기관 도착 전 현장활동 대원 건물 안전점검 및 위험성 평가 등 전문역량 강화 기여

- 실제 사고사례 중심, 건축전문가 입장의 현장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 등 설명

○ **(미담사례)** 교육 종료 후 교육생들이 작성한 교육 후기

◦**소방에 관계되는 사고사례 위주**로 하니 **유익**했다.
◦**사고사례**를 토대로 강의해주어서 좋았다.
◦교육이 **전반적으로 사례 위주로 쉽게 강의**해줘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
◦**5일간 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현장지휘관, 안전담당 모두 교육** 받으면 좋겠다.
◦좋은 강의 많이 배웠으며, **자료를 공유해주시면 다른 직원들 교육에 사용하겠다.**
◦현장활동과 연관있는 **건축구조와 붕괴에 관해서 알수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양한 소방 안전사고 사례도 함께 소개되었으면 한다.
◦건축물 사고 사례 공유가 가장 좋고 이해가 잘 되었다.
◦**다른팀도 받아야 할 교육**이며, **모든 직원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면 좋겠다.
◦**업무에 참고**가 되는 교육이다.
◦**지휘관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내용이 성실하였고, 유익한 교육이였다.
◦**KDRT대상으로 확대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해주면 좋겠다. KDRT출동은 대부분 지진에 따른 구조출동**으로 이번 **건축물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모든 내용이 참신**하고 좋았다.
◦**유익한 교육**이였고, 현장활동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교육을 자주 자주해 주었으면 한다.**
◦**정기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사이버교육도 있으면 좋겠다**.
◦**정규과정으로 편성**하여 **매년 실시**해주면 현장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문과정으로 확대운영**하고, **소방학교 교육과정에 포함** 시켜줬으면 좋겠다.

사례번호 ⑦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적극행정 우수사례(1)

<table>
<tr><td colspan="2">사례제목[1]
(정책명[2])</td><td colspan="5">화목보일러 관련 화재, 맞춤형 화재안전시설로 잡는다!
(「산림인접 화목보일러 주택 화재안전시설물품 설치」 지원 사업)</td></tr>
<tr><td colspan="2">사례요약[3]</td><td colspan="5">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 증가('14년 1%에서 '23년 7%), 주택 화목보일러 화재, 대형 산불로의 확산 방지 및 피해 저감을 위해 ① 한국화재보험협와 협력, 맞춤형 화목보일러 주택 화재안전시설물품 예산 확보(약 5억 원), ②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극복(적극행정위원회 활용)하고 화재안전시설 전국 설치 확대(1만여 개소)로 화재·산불 피해 저감</td></tr>
<tr><td colspan="2">기관명[4]
(부서명)</td><td colspan="5">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td></tr>
<tr><td rowspan="2">분야[5]</td><td>1차</td><td colspan="5">규제혁신 여부 Y ☐ N ☑</td></tr>
<tr><td>2차</td><td colspan="5">역동적 경제 ☐ 살기좋은 대한민국 ☑ 담대한 미래 ☐ 따뜻한 동행 ☐
기타 ☐ (직접입력 :)</td></tr>
<tr><td colspan="2" rowspan="3">공적자[6]</td><td>구분</td><td>부서명</td><td>직급</td><td>성명</td><td>연락처</td></tr>
<tr><td>주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
<tr><td>부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각종대회 수상실적[7]</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가점대상 여부[8]
(입증자료 필수)</td><td colspan="5">국민추천사례(+3점) ☐ 사회적 재난 대응(+3점) ☐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3점) ☐ 협업사례(+3점) ☐</td></tr>
<tr><td colspan="2">기타 해당 여부[9]</td><td colspan="5">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사례 ☑ 기관 중점 추진과제 ☐
※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1회('23.9.13) ※ 산림인접 화목보일러 주택 화재안전시설물품 설치사업</td></tr>
<tr><td rowspan="2">사례내용</td><td>상황[10]</td><td colspan="5">○ 주택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 등으로 인한 대형 산불 확산 방지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화재안전시설물품 설치 확대 필요
※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은 '14년 전체 산불의 1%에서 '23년 7%를 차지할 만큼 꾸준히 증가(산림청 통계자료)
☞ 화목 연료 과다 사용에 따른 과열, 불씨가 살아있는 재(灰)의 무단투기 등 개인의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지고 있음
○ 소방청-한국화재보험협회 간 업무협력을 통해 화목보일러 주택 화재안전시설 물품 설치 예산(약 5억원, 1만여 개소) 적극 확보


소방청-한국화재보험협회 간 업무협약


소방청-한국화재보험협회 간 협업 추진</td></tr>
</table>

	난관[11]	① 화목보일러 주택 화재안전 지원 사업 **화재안전시설 물품**으로는 **간이스프링클러 자재**와 **자동확산소화기**가 있는데, -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 설치 설비**이지만 **국가화재안전기준이 없는 설비**를 **소방기관**에서 **설치**해도 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음** ※ **화목보일러실 주택 간이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의무적으로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아니며**, **「국가화재안전기준」도 없음** 【 주택 화목보일러실 간이SP 설치과정 】  ① 화목보일러 급수배관 분기작업 ② 폐쇄형 SP헤드 설치(93℃ 개방) ③ 설치완료(보온재 설치 등 마무리) ② 화목보일러 주택 **관계인의 화재안전시설물품 설치 공감대 부족, 변심** 등으로 **당초 설치일정**('24.1월~4월) **지연**
	적극[12]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요청**, **심의·가결**('23.9.23), **사업 추진** - **(심의의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에 따른 **추후 민사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사항**과 **임의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권고 필요** **활용 전**: ·설치 규정(기준)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 소방기관에서 적극적 홍보 및 설치 권유 곤란 ⇨ **활용 후**: ·**국민의 편익(화재피해 저감) 증진 관련 사항**으로 **적극 해석**하여 **화재안전시설물품 확대 설치** ○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의 화목보일러 화재안전시설물품 설치 필요성 강조 등 **적극적인 홍보**로 **지원사업 성공적 완수**('24.6월) 【 화목보일러실 화재안전시설물품 설치 언론보도 사진 】 

	효과[13] 및 미담사례[14]	○ 효과 - 전년 동기간('23.1.~5./'24.1.~5.) 대비 화목보일러 화재 건수 31.1% ↓, 인명피해 45.5% ↓, 재산피해 22.2% ↓ 감소

기 간	화재(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억원)
'23.1~5월	312	18	30.7
'24.1~5월	215	10	23.9

* 통계자료 출처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전년 동기간('23.1.~5./'24.1.~5.) 대비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 건수는 60% ↓, 피해면적 99% ↓ 감소

기 간	산불(건)	피해면적(ha)	비 고
'23.1~5월	5	36.59	2월 2건, 3월 3건
'24.1~5월	2	0.58	3월 1건, 4월 1건

* 통계자료 출처 : 산림청 산불피해대장 - '발생원인 : 화목보일러'

- 전국 1만여 개소 화목보일러 주택 화재안전시설물품 설치, 화재 예방·대비, 화재 및 산불 확산 방지 기여

○ 미담사례

- "화목보일러 화재 자동확산소화기로 화재피해 막아"('24.3.5, 언론보도)

☞ **(주요내용) 2024.3.2. 저녁 8시 46분경 충북 보은군 마로면 소재 주택** 내 화목보일러 인근 가연물에 불이 붙으며, 나무더미로 연소가 확대됐으나 당시 자동확산소화기가 작동해 곧바로 진압됨

- 화목보일러 화재안전시설물품 설치 필요성 대국민 적극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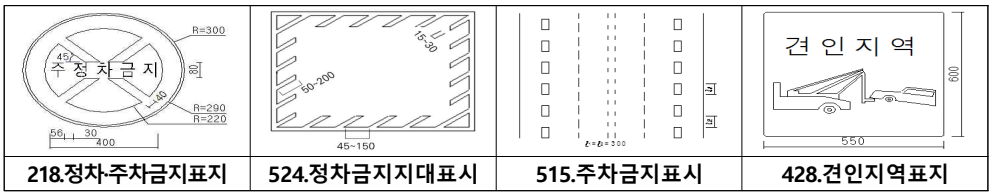
【 연합뉴스TV 대국민 방송 보도(홍보) 사례(예시) 】



사례번호 ⑧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적극행정 우수사례(2)

<table>
<tr><td colspan="2">사례제목[1]
(정책명[2])</td><td colspan="5">소방서 차고 앞 불법 주차? 소방청-경찰청 협업으로 차단!
(소방서 차고 앞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추진)</td></tr>
<tr><td colspan="2">사례요약[3]</td><td colspan="5">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어 매우 중요하나, 일부 시민들은 소방차 진·출입로인 소방서 차고 앞에 주·정차를 하는 등 미성숙한 불법 행위가 만연한 실정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업하여 소방서 차고 앞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관리로 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정책 개선함</td></tr>
<tr><td colspan="2">기관명[4]
(부서명)</td><td colspan="5">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td></tr>
<tr><td rowspan="2">분야[5]</td><td>1차</td><td colspan="5">규제혁신 여부 Y ☐ N ☑</td></tr>
<tr><td>2차</td><td colspan="5">역동적 경제 ☐ 살기좋은 대한민국 ☑ 담대한 미래 ☐ 따뜻한 동행 ☐
기타 ☐ (직접입력 :)</td></tr>
<tr><td colspan="2" rowspan="3">공적자[6]</td><td>구분</td><td>부서명</td><td>직급</td><td>성명</td><td>연락처</td></tr>
<tr><td>주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
<tr><td>부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각종대회 수상실적[7]</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가점대상 여부[8]
(입증자료 필수)</td><td colspan="5">국민추천사례(+3점) ☐ 사회적 재난 대응(+3점) ☐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3점) ☐ 협업사례(+3점) ☑
※ 경찰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td></tr>
<tr><td colspan="2">기타 해당 여부[9]</td><td colspan="5">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사례 ☐ 기관 중점 추진과제 ☑
※ (국정과제 65-4) 신속하고 정확한 소방대응시스템 구축</td></tr>
<tr><td rowspan="2">사례내용</td><td>상황[10]</td><td colspan="5">○ (주차질서) 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어 중요하나,
일부 시민은 소방서 차고 앞에 주정차 등 미성숙한 불법 행위 지속
사례1 불나면 어쩌려고..해맞이 차량 경포119 차고앞 무단주차 말썽('18.1.)
사례2 인천서 포착된 '소방서 앞 주차 빌런', 사람들 공분 터졌다('23.10.)
사례3 "밤에는 불 안 나나요?" 소방서 앞 막은 '주차 빌런'에 공분('23.11.)
 
○ (규제부재) ※ 현재, 출동시 단속 근거만 有 출동 대기·귀소중 위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無
↳ 근거 부재로 소방대원과 차주간 불필요한 마찰 발생 가능(민원 부담·직원 피로도 ↑)</td></tr>
<tr><td>난관[11]</td><td colspan="5">○ 소방서 차고 앞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위해, 차고 앞 대지를 '도로교통법 상 도로'로 해석·인정해야 하나, 일선 경찰서에선 차고지 앞 대지는 사유지로 해석돼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렵다는 견해임
☞ 일선소방서 ↔ 일선경찰서간 소방서 차고 앞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요청 협의 결과, 소방차량의 진출입을 위해 점용허가 받은 사유지로 판단되어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려움, 다만, 상위 기관(경찰청 본청)의 법령 해석 등이 있다면 적극적인 협조 가능</td></tr>
</table>

	적극[12]	○ 소방서 차고 앞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위해,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도로로 인정토록 경찰청에 적극적인 유권 해석 요청** ☞ 불특정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 대해서도 도로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대판2003도4807, 2002도6710, 2010도6579) ○ (경찰청 회신 결과) 소방서 출동 차량 차고 앞 주정차 금지구역 일괄 지정은 **현재 도로교통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추진하기 힘드나**, 소방차량 출동 목적이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최일선인 만큼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소방서 주변 교통여건이 적합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치경찰위 협조를 통해 경찰서별 다음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항에 대해 자체 계획 수립·시행 처리토록 함** **【 교통안전시설 】**  **218.정차·주차금지표지** / **524.정차금지지대표시** / **515.주차금지표시** / **428.견인지역표지** ○ (교통안전시설 설치 추진) **전국 소방청사 1,763개소**(소방서 240, 안전센터 1131, 지역대 392)에 대해 **지방경찰청 및 시도 자치경찰위 협조**를 통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추진계획 수립·전파 **소방청→ 경찰청·자치경찰위**: **차고앞, 교통안전시설 설치 협조(완료,'24.4.2.)** → **자치경찰위→ 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설치 **적극협조 공문** 전파 → **경찰청(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 안건 상정·승인 → **(후속조치) 시군·소방서**: (시군)교통안전시설 설치 (소방서)대국민 홍보·계도 ※ '25년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업무편람 개정 시 위 내용을 권장사항으로 추가 예정 **【 교통안전시설 설치안 】** 

	효과[13] 및 미담사례[14]	○ 소방청과 경찰청 중앙차원의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소방서 차고 앞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위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정차금지·견인지역 표지판 설치, 주·정차금지 지대 노면표시, 도로 가장자리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24시간 항시 출동' 체계를 구축**하였음

사례번호 ⑨

소방청 구조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table>
<tr><td colspan="2">사례제목[1]
(정책명[2])</td><td colspan="5">소방의 국제화를 통해 대한민국 재난 대응 역량의 수출길을 열다.
(「소방청-UAE국가방위사령부」구조역량 교류협력 사업)</td></tr>
<tr><td colspan="2">사례요약[3]</td><td colspan="5">○ UAE 국방부는 기후변화 관련 재난 위기를 체감하고 대한민국 소방의 탐색·구조분야 모범사례 견학 등 공식 외교공한을 통해 기관방문 요청
○ 동 방한을 계기로 국가 간 재난 대응 협력* 신규 사업을 자체 발굴, 적극적인 행정 및 실무 추진으로 소방의 국제화** 실현 발판 마련
※ 국가 간 현장대원 역량강화, 우호관계 제고, 구조역량 수출로 경제효과 창출 기대</td></tr>
<tr><td colspan="2">기관명[4]
(부서명)</td><td colspan="5">소방청
(119대응국 구조과)</td></tr>
<tr><td rowspan="2">분야[5]</td><td>1차</td><td colspan="5">규제혁신 여부 Y □ N ■</td></tr>
<tr><td>2차</td><td colspan="5">역동적 경제 □ 살기좋은 대한민국 □ 담대한 미래 ■ 따뜻한 동행 □ 기타 □</td></tr>
<tr><td colspan="2" rowspan="3">공적자[6]</td><td>구분</td><td>부서명</td><td>직급</td><td>성명</td><td>연락처</td></tr>
<tr><td>주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
<tr><td>부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각종대회 수상실적[7]</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가점대상 여부[8]
(입증자료 필수)</td><td colspan="5">국민추천사례(+3점) □ 사회적 재난 대응(+3점) □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3점) □ 협업사례(+3점) ■
※ UAE 국가방위사령부 및 주한UAE대사관 무관부</td></tr>
<tr><td colspan="2">기타 해당 여부[9]</td><td colspan="5">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사례 □ 기관 중점 추진과제 ■</td></tr>
<tr><td rowspan="3">사례내용</td><td>상황[10]</td><td colspan="5">○ UAE 국방부 대표단이 대한민국 소방의 구조 역량 견학을 위해 방한
※ 중동지역인 본국 아부다비에 쓰나미로 인한 피해를 받는 등 기후변화 위기 체감
○ 동 방한를 계기로 국가 간 재난 대응 협력 신규 사업 발굴·추진
※ '23.2. 튀르키예 지진 대응 등 우수한 구조 역량을 바탕으로 소방의 국제화 목표
○ 양국의 재난 대응 및 역량 강화 목적의 업무협약(MOU) 협의·체결
※ (일자) 2024.5.22.(수) / (장소) 대구 EXCO / (대상) 소방청장↔UAE국방사령관</td></tr>
<tr><td>난관[11]</td><td colspan="5">○ 정책 및 사업 결정권자(고위직)의 대한민국 소방의 제안 수용 여부
○ UAE측은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구조 전문역량 위탁교육 등) 파트너 선정을 위해 해외 주재 공관을 통해 비교·평가를 실시,
○ 적극 행정으로 속도감 있는 소방의 역량 홍보, 컨설팅 등 협의 필요</td></tr>
<tr><td>적극[12]</td><td colspan="5">○ (추진체계) 대한민국 소방청 ↔ UAE 국방방위사령부 업무협약(MOU)
계획수립·협력제안
■ 실무자 수요·환경분석
■ 교류협력 제안·협의
■ UAE 국방부 대표단 왕실 보고·승인(추진 지시)
⇨
사전 협의체 운영
■ (한측) 소방청 구조과
■ (UAE측) 주한UAE대사관 무관부
■ 현지실사 및 실무자 협의
⇨
추진 및 결과 도출
■ 구조전문 위탁교육과정 제안서 제작 및 전달
※ 외교행낭을 통해 UAE 발송
■ 업무협약(MOU) 체결 협의</td></tr>
</table>

사례	**적극**[12]	○ **탐색·구조분야 경험 및 모범사례 학습**을 위한 **UAE 국방부 대표단 방한** - 외교공한 접수 후 방문 계획(2일간) 수립·운영 / 대표단 부사령관 등 8명

내용


Letter of Invitation

공식 초청장 발송



대한민국 소방청 소개 등



훈련기관(중구본) 방문

- (의제) 탐색구조 관련 조직, 정책, 역량, 전문 교육훈련 등 전반

▸ 탐색구조 작전 방식 및 개념	▸ 조직 구조 및 상하 관계
▸ 훈련, 인사(보직) 관리 및 개발	▸ 필요 역량 및 장비
▸ 구조전문훈련 커리큘럼	▸ 소방청 관련 기관 및 파트너

※ 국제구조대(탐색구조) 국제출동 현황·보유 역량 및 활약상, 국제소방안전박람회 홍보

○ 소방의 국제화 실현, 국가 간 우호관계 제고 및 대응역량 강화 추진

- 동 방한을 계기로 적극적인 교류 의사 표명 ⇨ UAE 국방부 검토
- **'UAE 왕실' 방한(대한민국 소방청 견학) 결과 보고 간 즉시 추진 지시***

※ 주한UAE대사관 국방무관(Hamad Alkindi)

"본국의 실사단 구성 없는 현지 대사관에 직접 추진 지시는 이례적, 개인적으로 굉장한 영광이며 반드시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싶다." 는 **공식 의사 전달**

* 주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사관 무관부 공식 문의('23.9.11. / 청 구조과)

○ (소방청) 협의체 구성 및 추진 계획 수립, 위탁훈련 현지답사·실무회의

- (1차) 현지 실사, 위탁 훈련과정 소개 및 UAE측 요청사항 확인(9.14.~15.)
- (2차) 선제 조건 협의(교관 파견, 사전 교육, 기간, 보험, 제반 비용 등 / 10.30.)
- (3차) UAE 위탁 훈련과정 북클릿 제작·전달, 협약(안) 최종 협의(11.1.)


소방청 - UAE 국방부 업무협의 실무회의 추진 계획

실무회의 추진 계획 수립



'과정, 커리큘럼, 위탁비용 등'

북클릿(구조 위탁훈련과정)



3실무회의(주한UAE무관부)

※ 주한UAE무관부측 본국으로 리포트 및 소방청 제작 북클릿 발송(왕실 검토 / 11.3.)

↳ **경제효과** **10개 중 7개 과정 수입비용(268천불, 3억7천만원), 3개 과정(추후협의) UAE측 위탁대상자 국내 체류 간 창출 + @(숙박, 식사, 장비 구매 등 기타 활동)**

사례번호 ⑩

소방청 119구급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table>
<tr><td colspan="2">사례제목[1]
(정책명[2])</td><td colspan="5">해외에서 아플 때도 119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서비스 운영
(「재외국민 보호 119응급의료서비스」 운영 사업)</td></tr>
<tr><td colspan="2">사례요약[3]</td><td colspan="5">해외에서 질병·부상 시 현지 의료정보가 부족하고 높은 치료비용과 언어 장벽으로 재외국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 등을 놓쳐 치료가 지연되거나 더 큰 질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재외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해외에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등 체계 구축
- 365일,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를 통한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체계 구축(재외국민↔외교부↔소방청 다자통화, 연간 4천 건)
- 국제구급대 신설 및 업무협약으로 국제 행사 지원* 및 재외 안전교육**실시
* 항저우 아시안게임, 파리올림픽/8명 ** 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 카메룬, 스리랑카/3회, 3명
- 영사 조력, 현지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환자 국내 송환을 위하여 재외공관에 소방주재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td></tr>
<tr><td colspan="2">기관명[4]
(부서명)</td><td colspan="3">소방청
(119구급과)</td><td colspan="2">외교부
(0000과)</td></tr>
<tr><td rowspan="2">분야[5]</td><td>1차</td><td colspan="5">규제혁신 여부 Y ☐ N ☑</td></tr>
<tr><td>2차</td><td colspan="5">역동적 경제 ☐ 살기좋은 대한민국 ☑ 담대한 미래 ☐ 따뜻한 동행 ☐
기타 ☐ (직접입력 :)</td></tr>
<tr><td colspan="2" rowspan="4">공적자[6]</td><td>구분</td><td>부서명</td><td>직급</td><td>성명</td><td>연락처</td></tr>
<tr><td>주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
<tr><td>부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
<tr><td>부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각종대회
수상실적[7]</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가점대상 여부[8]
(입증자료 필수)</td><td colspan="3">국민추천사례(+3점) ☐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3점) ☐</td><td colspan="2">사회적 재난 대응(+3점) ☐
협업사례(+3점) ☑</td></tr>
<tr><td colspan="2">기타 해당 여부[9]</td><td colspan="3">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사례 ☐</td><td colspan="2">기관 중점 추진과제 ☑
※ (국정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 국민 밀착형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td></tr>
<tr><td rowspan="2">사례내용</td><td>상황[10]</td><td colspan="5">○ 해외여행자·유학생, 재외동포 및 해양선박 선원·승객, 항공 승무원·승객 등이 해외에서 질병·부상 시 현지 의료정보 부족, 치료비용 부담 및 언어 장벽 등으로 재외국민의 생명·안전 보장에 한계
※ 최근 5년간 출국자 수(선박, 항공 포함) 및 재외국민 현황
<table><tr><th>구 분</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tr><td>출국자(명)</td><td>28,714,247</td><td>4,276,006</td><td>1,222,541</td><td>6,554,031</td><td>22,715,841</td></tr><tr><td>재외국민*(명)</td><td>7,493</td><td>-</td><td>7,325</td><td></td><td>7,081</td></tr></table>* 출처: 재외동포청(2년 단위 통계 생산)
○ (국정과제 및 소방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정과제-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국민 밀착형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으로 선정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정책 추진력 확보하여 재외국민의 생존·건강권 보장 및 국가 책임성 강화 이행</td></tr>
</table>

	난관[11]	○ **(법적 근거 등 미비)** 재외공관에 소방주재관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파견선발 범위에 '소방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 관련 법령(「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소방공무원이 지원할 근거가 없었음** - 국내 육상재난에서 대국민 구급 활동은 소방이 책임을 다하고 있으나, 재외국민 특성상 해외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 대비·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인사기획관, 재외국민보호과, 해외안전상황실)의 협조가 필수**적
	적극[12]	**1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세계화** ○ **(대상)** 재외국민, 선박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승객 등 ○ **(지도의사)**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소속 응급의학과 전문의 ○ **(접수방법)** 메일, 전화, 홈페이지, 메신저(카카오톡, LINE) ○ **(주요내용) 응급의학 전문의**를 배치하여 **365일, 24시간** 응급처치 요령, 복약지도, 현지 의료기관 정보, 국내이송 절차 안내 등 상담 **< 추진경과 >** ❶ (최초) '12. 부산소방 "119해상응급의료서비스' 도입 ❷ (개선) '18.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신설로 업무 이관 ❸ (대상확대) '20. 육상·해상 등 전 세계 재외국민 ❹ (다변화) '20.~'23.5.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신청·안내 방법* 확대 * 전화(+82-44-320-0119), 이메일(central119ems@korea.kr), 홈페이지(www.119.go.kr), 카카오톡 채널(소방청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 LINE(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추가 ❺ (서비스확대) '22. 공항 내 해외 귀국 중증환자 이송 전담구급대 배치 **< 항공상담 시범운영 추진 >** ❶ (추진배경) 코로나19 이후 국가 간 이동 재개에 따른 항공기 이용객 증가 ❷ (대상/기간) **EASTARJET(이스타항공)** / '24. 8월 ~ ❸ (주요내용) 비행 중 객실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상담 제공 등 - 이스타항공↔소방청 핫라인 구축 / 홍보영상, 리플릿 등 배치 **2 국제구급대* 신설** * 국외 대형재난 등 발생 시 재외국민에 대한 구급 활동, 국내 의료기관 이송 또는 재난발생국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급 활동을 위해 구급대원 편성된 조직 ○ **(법적근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23.8.16.) ○ **(업무협약) 소방청-외교부 체결**(재외국민 보호 협력체계 강화, **'23.10.4.**) ○ **(기반구축)** 인력풀 및 교육훈련 체계 등 - 국제구급대원 **선발기준 마련 등**('24.1월) - 재난응급의학회 협업하여, 필수교육 및 훈련체계 마련('24.下)

3 재외공관 소방주재관 배치

○ 재외국민 재난사고 관련 응급 의료에 대한 **영사 조력, 현지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환자 국내 송환** 업무 등을 위한 **소방공무원 파견**

○ **(법령개정)「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4.5.28.)

< 개정내용 >

[별표2] 주재관 정원표 **'경찰 분야' 일반직공무원(66명)**
→ **경력직공무원(소방공무원 포함)**으로 **선발 범위 확대**

< 외교부 의견 >

관계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경쟁을 통한 우수 인재 선발 필요
※ (행안부 의견) 해외 안전사고 등 문제로 소방직 공무원을 염두

○ **(대상)** 우리 국민과 관광객이 많아 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으나 현지 의료수준이 낮아 국내이송 수요가 많은 국가 등

○ **(업무)** 주재국 공공구급차 운영기관(주로 소방기관)과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및 의료정보제공-공항이송-국내이송 등 全과정 컨트롤* * 전문구급대원↔119구급상황관리센터(소방청), 현지 응급기관 공조하여 환자 이송을 위한 최적의 환경 제공 및 골든타임 확보

효과[13] 및 미담사례[14]

○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체계 구축

- 재외국민↔외교부↔소방청 **다자통화**로 의료상담서비스 시행

※ 365일, 24시간 / 응급의학전문의 4명, 구급상황관리요원(간호사, 응급구조사) 12명



- '18~'23년까지 연평균 이용 증가율 **29.4%(일평균 11명), 지속 증가** 추세

❶ 접수방법은 **메일 39%**, 전화 32%, 카카오톡* 27%, 홈페이지 2% 순

* ('23년) 카카오톡 접수가 51%로 SNS 문의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

❷ 처치결과는 **의료상담 54%**, 복약지도 21%가 높은 비중을 차지

구분	합계	접수방법(건)				합계	처치결과(건)			
		메일	전화	홈페이지	카카오톡		의료상담	처치지도	복약지도	기타
계	16,571	6,483	5,364	262	4,419	16,032	8,238	3,162	3,310	1,322
'23년	4,135	1,393	619	32	2,091	4,135	2,108	696	1,137	194
'22년	3,811	1,492	775	24	1,520	3,811	1,804	713	1,058	236
'21년	2,576	1,107	724	46	699	2,576	1,485	612	381	98
'20년	2,617	1,320	1,112	76	109	2,617	1,802	288	299	228
'19년	2,277	751	1,401	82	-	2,277	784	668	277	548
'18년	1,155	420	733	2	-	616	255	185	158	18

- 최근 3년간 여행·유학 등으로 **20~40대**가 **6,543건(62.1%)**으로 가장 많음

구분	합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미상
계(명)	10,522	803	292	2,282	2,411	1,850	1,102	708	109	965
'23	4,135	423	115	993	958	729	379	218	44	276
'22	3,811	300	127	811	848	625	426	294	46	334
'21	2,576	80	50	478	605	496	297	196	19	355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국제 행사 및 교육·홍보 활동 파견**

-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임시영사사무소** 소방공무원 파견(2명)
- **2024 파리올림픽 임시영사사무소** 소방공무원 파견(6명)
- **재외국민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소방공무원 파견(3명)

  * 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24.4월), 카메룬('24.6월), 스리랑카('24.6월)

○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실제 사례**

- (육상) 호주 거주 재외국민이 발이 변색되고 붓는 증상 관련 의료상담('23.12월)
- (해상) 작업 중 암모니아를 다리에 쏟은 화상 환자 의료상담 및 처치 지도('23.6월)
- (항공기) 경련 후 의식은 회복했으나 활력징후 불안정 환자로 비행을 지속 여부에 대한 의료자문 요청에 정맥로 확보 및 수액 투여 등 처지 지도('23.10월)

사례번호 ⑪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
적극행정 우수사례

<table>
<tr><td colspan="2">사례제목[1]
(정책명[2])</td><td colspan="5">병원과 일치된 응급환자 분류 방식 도입으로 ‘응급실 뺑뺑이 ‘ OUT!
(「병원이송 前단계 중증도 분류」 사업)</td></tr>
<tr><td colspan="2">사례요약[3]</td><td colspan="5">· 119구급대는 병원이송 前 단계에서 병원과 동일한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방식을 도입함으로 일치된 환자분류법 시행
· 이를 기반으로 중소병원과 종합병원에 적절한 환자를 이송함으로써 ‘응급실 뺑뺑이’가 없도록 과밀화를 해소
· 환자의 치료 시간을 단축하고, 의료지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td></tr>
<tr><td colspan="2">기관명[4]
(부서명)</td><td colspan="5">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td></tr>
<tr><td rowspan="2">분야[5]</td><td>1차</td><td colspan="5">규제혁신 여부 Y □ N ■</td></tr>
<tr><td>2차</td><td colspan="5">역동적 경제 □ 살기좋은 대한민국 ■ 담대한 미래 □ 따뜻한 동행 □
기타 □ (직접입력 :)</td></tr>
<tr><td colspan="2" rowspan="3">공적자[6]</td><td>구분</td><td>부서명</td><td>직급</td><td>성명</td><td>연락처</td></tr>
<tr><td>주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
<tr><td>부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각종대회 수상실적[7]</td><td colspan="5">없음</td></tr>
<tr><td colspan="2">가점대상 여부[8]
(입증자료 필수)</td><td colspan="5">국민추천사례(+3점) □ 사회적 재난 대응(+3점) ■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3점) □ 협업사례(+3점) □</td></tr>
<tr><td colspan="2">기타 해당 여부[9]</td><td colspan="5">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사례 □ 기관 중점 추진과제 □</td></tr>
<tr><td rowspan="3">사례내용</td><td>상황[10]</td><td colspan="5">□ 사회적 필요성 및 정책 추진 계기
·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선호 현상으로 인한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대형병원 응급실 병상 부족
·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응급실 의사 부재로 병원 선정의 어려움
· 중증환자의 생명보호를 위해 119구급차 출동단계에서부터 경증 환자를 분류해 분산이송을 진행하여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 필요</td></tr>
<tr><td>난관[11]</td><td colspan="5">□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
· 119구급대와 병원 간 응급환자를 바라보는 시각(분류) 차이가 발생
▲ (119구급대) : 중증도 평가 후 이송 가능 병원 선정
▲ (의료기관) : 중증도 평가 후 진료 우선순위 결정
· 119구급대와 병원 간 업무효율화를 위해 ‘실시간 응급실 정보공유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병원의 업무 증가 부담을 이유로 적용 불가
· 119구급대와 병원 간 회의 등 소통 부재로 인한 기관 간 협력의 어려움 발생
· 전 구급대원(약12,000명) 교육·훈련을 위한 예산(약 8억원) 확보필요</td></tr>
<tr><td>적극[12]</td><td colspan="5">□ 업무협의를 위한 ‘기관장급 회의’ 개최
· 2024. 5월 119구급대의 병원 전 중증도 분류 관련 법령 개정(안) 상호협의를 위한 소방청 차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 회의 실시</td></tr>
</table>

□ **119구급대원과 병원 간 '응급환자 분류 방법' 일치 작업 추진**

· 환자의 다양한 증상을 고려하여 분류 방법을 개선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급대원 개인의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아닌 **객관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함.

(기존) 응급환자 분류

응급	준응급	잠재 응급	대상외	사망

- 주관적(기준이 모호)
- 병원 단계 분류와 기준이 달라 의사소통 한계
- 이송병원 선정에 영향을 주지 않음

(개선) Pre-KTAS 분류

Level 1 소생	Level 2 긴급	Level 3 응급	Level 4 준응급	Level 5 비응급

- 객관적(기준이 명확)
- 병원 단계와 같은 5단계 분류로 의사소통 명확화
- 중증도 분류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

□ **전 119구급대원 '중증도 분류' 교육을 위한 예산 8억원 확보**

· 예산 요구자료 작성 및 기획재정부, 복지부 설득을 통해 **응급의료기금 8억 1,900만원 확보**

□ **전 119구급대원 '중증도 분류' 집중 교육 및 훈련 추진**

· **병원이송 前 중증도 분류 교육 강사과정 및 제공자 교육**(111회 / 11,655명 이수)
– '23년 11,953명 중 9,375명 이수, '24년 3,434명 중 2,280명 이수

· 병원이송 前 환자분류 품질향상 워크숍('23.11.2.~11.3.), 중증도 분류 문제 해설집 및 교육매뉴얼 제작 및 배포('23.12월)



구급대원 교육



구급대원 워크숍 개최



교육 매뉴얼 제작 배포

□ **구급대원용 모바일 앱 개발을 통한 업무 간소화 추진**

· 구급활동일지 작성과 연계하여 119구급스마트시스템에 탑재한 앱을 개발하여 입력이 쉽게 가능하도록 개선

□ **병원이송 前 단계 중증도 분류를 통한 이송지침 완화**

· 기존 종합병원(응급 의료 기관급)으로 이송하던 환자를 병원 전 단계 중증도 분류를 통해 **경증환자는 병·의원**으로 **이송지침 완화**

중증도 분류에 따른 분산 이송 지침	※ 이송 거절·거부 관련해서는 기존 지침에 따름
레벨 1-2	·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위주로 이송 - 환자 상태(심정지 임박 등)와 여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 이송 가능
레벨 3	· 응급의료기관 위주로 이송 - 환자 상태와 여건에 따라 권역·지역센터나 응급의료시설 등 이송 가능
레벨 4	· 응급의료시설 위주로 이송 - 환자 상태와 여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나 일반 병·의원 등 이송 가능
레벨 5	· 일반 병·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이송 가능 - 환자 상태와 여건에 따라 미이송(이송거부) 또는 응급의료시설 등 이송 고려

효과[13] 및 미담사례[14]

☐ 정책 주진 이전과 이후의 비교 및 주요성과

· **(응급실 과밀현상 완화) 대형병원 응급실 이송 환자수 15% 감소**

- 병원 이송 前 중증도 분류 시행 전('23. 2. 1.~ 6.30.) 기간 대비 시행후('24. 2. 1.~6. 30.) **대형병원 응급실 환자 이송 수 감소**

구 분	Pre-KTAS 시행 전	Pre-KTAS시행 후
대형병원	74%	59%(▼15%)
중소병원	26%	41%(▲15%)

· **(병원 수용성 영향) 병원 도착 후 인계시간 10% 단축**

- 병원이송 前 중증도 분류 시행 전('23. 2. 1.~6. 30.) 기간 대비 시행 후('24. 2. 1.~6. 30.) **병원 도착 후 환자 인계 시간 10분에서 9분으로 단축**

활용 전		활용 후
· 대형병원 응급실 환자수 74% · 병원도착 후 병원 인계시간 평균 10분(기간: '23.2.1.~6.30.)	⇨	· **대형병원 응급실 환자수 59%** · **병원도착 후 병원 인계시간 평균 9분**(기간: '24.2.1.~6.30.)

· **(부처 협의 추진)** 보건복지부와 병원 전 중증도 분류 교육의 내용과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의견이 달라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제처 조정 및 기관장급(차관, 차장) 협의**를 통해 해결

· **(전국 시행)** 경기 북부, 충청남도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 2월 전국 확대 시행

구분	기간	참여소방서 및 참여인원
1차 시범사업	'22.05.02. ~ 06.05.	· 6개 소방서(경기북부 3, 충남 3) · 구급대원 165명
2차 시범사업	'22.08.08. ~ 09.30.	· 14개 소방서(경기북부 11,충남 3) · 구급대원 285명

·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최적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 수행

☐ 미담사례

· **(의사집단 행동)** 최근 의사집단 행동에 따른 병원선정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선된 병원이송 前 중증도분류를 통해 경증 환자를 치료 가능한 병·의원으로 이송하여 대기시간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24.5.20 / 경기도 ㅇㅇ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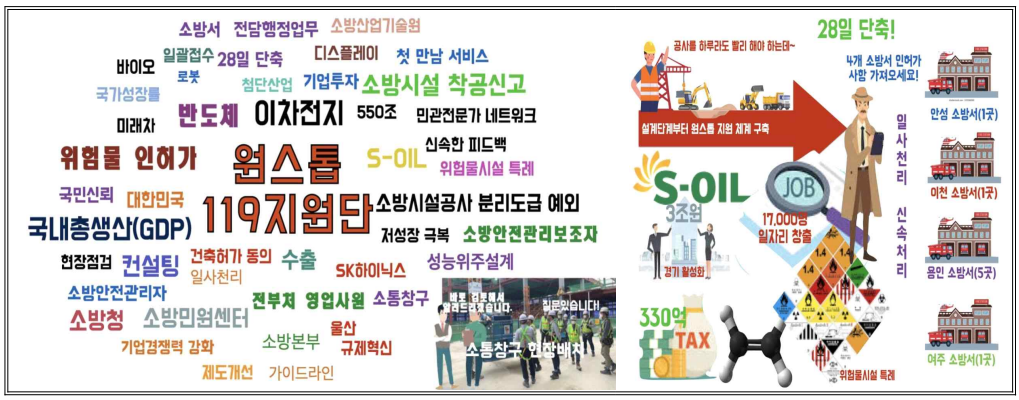
		□ **보도자료** · (의협신문) 119구급대-병원 응급환자 분류체계 통일 · (아주경재) 소방청, 병원 전 증급환자 중증도 분류 2월 전국 시행 '응급실 뺑뺑이' 해소 기대 · (연합뉴스) 응급환자 이송 더 원활하게 구급대·병원, 중증도 분류 일원화 · (의학신문) 전국 시행한 병원 전 환자분류체계 실효성 강화

사례번호 ⑫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적극행정 우수사례(1)

<table>
<tr><td colspan="2">사례제목[1]
(정책명[2])</td><td colspan="5">공장 신축 단계부터 인허가 완공까지 K-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 등판
(국가정장동력 원스톱 119지원단 운영계획)</td></tr>
<tr><td colspan="2">사례요약[3]</td><td colspan="5">국가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정책기조에 따라 국가첨단산업 공장의 신속한 인허가와 안전한 공정을 위해 소방청·소방본부·지자체 중심으로 운영 → ①각 종 문제 해결지원, ②정보제공, ③유기민원을 본부에서 일괄 신속처리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결국 규제 합리화 실현”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발전 초석 마련</td></tr>
<tr><td colspan="2">기관명[4]
(부서명)</td><td colspan="5">소방청
(화재예방국 화재예방총괄과)</td></tr>
<tr><td rowspan="2">분야[5]</td><td>1차</td><td colspan="5">규제혁신 여부 Y ■ N □</td></tr>
<tr><td>2차</td><td colspan="5">역동적 경제 ■ 살기좋은 대한민국 □ 담대한 미래 □ 따뜻한 동행 □
기타 □ (직접입력 :)</td></tr>
<tr><td colspan="2" rowspan="4">공적자[6]</td><td>구분</td><td>부서명</td><td>직급</td><td>성명</td><td>연락처</td></tr>
<tr><td>주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
<tr><td>부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
<tr><td>부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각종대회 수상실적[7]</td><td colspan="5">해당없음</td></tr>
<tr><td colspan="2">가점대상 여부[8]
(입증자료 필수)</td><td colspan="5">국민추천사례(+3점) □ 사회적 재난 대응(+3점) □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3점) □ 협업사례(+3점) □</td></tr>
<tr><td colspan="2">기타 해당 여부[9]</td><td colspan="5">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사례 ■ 기관 중점 추진과제 □
※ 종류 및 일자
위원회 1회, 24년 상반기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제출(24.06.24)
※ 과제명</td></tr>
<tr><td rowspan="2">사례내용</td><td>상황[10]</td><td colspan="5">전 부처의 `<b>산업부화</b>`, `<b>영업사원</b>` 기조 하에 모든 부처가 수출담당 부처라는 명확한 책임의식으로 수출지원역량 결집(‘23.2.23. 대통령실)
(분석결과) 최근 10년간(‘14~’23년)국내총생산(GDP)은 환율 영향으로 매년 증가 실제적 경제성장률은 하락추세 → 국가적 대책 마련 필요


출처 : 국정모니터링 시스템
◆ 정부의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 경제정책, 전 부처의 산업부화 →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투자 확대 지원 강화
◆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한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은 ‘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 집중 투자(‘23.3.15. 대통령실)
* ①반도체, ②디스플레이, ③이차전지, ④바이오, ⑤미래차, ⑥로봇
◆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총 4,076만㎡(약 1,200만평) 규모 15개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업투자 전폭 지원(‘23.3.15. 대통령실)</td></tr>
</table>

		• 국가사업은 **인허가 단계**부터 체계적 **지원방안** 강구('23.11.3, 청장지시) ↳ 화재안전분야 기업**애로 사항 청취**해결, **인·허가 절차단축** 등 관련 공장 설립 적극 지원 및 제도개선 병행 추진('23.12~'26.12(3년)/ 필요시 연장)
	난관[11]	• **길이·규모가 다양**한 전력구, 펌프장, 가압장의 경우 **다수 관할 소방서의 건축허가 동의 및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순차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 **장기간 소요 → 기업경쟁력 약하** ※ (경기) 지하 전력구·취수시설·폐수처리장의 경우 다수 관할소방서와 연계되어 행정처리의 어려움 발생 • S-oil에서 약9조2,580억원*을 투자, 4년간('23~'26년) **대한민국 장기 에너지에 대비**하고, **석유화학제품을 극대화**하는 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업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추진 * '18년 5조원 투입 및 완공한 1단계 프로젝트의 후속사업 ※ (울산) 소방서의 건축허가 동의 및 소방시설 착공신고 등으로 공사일정 지연 • 기타 **애로사항 청취** 및 소방시설, 위험물 시설 **인·허가 관련 사전 협의** 진행을 위해서 업무 담당자와의 소통창구 한계 발생
	적극[12]	 **[경기본부 일사천리 소방민원센터]** **"민원 일괄 접수·처리로 기업경쟁력 강화"**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SK하이닉스) 전력구 등 8곳(신축) - 일사천리 경기소방 **카카오 채널**을 통한 처리절차 등 사전 협의 - 소방본부 광역소방민원지원센터에서 8곳 민원 **일괄 접수·처리** ↳ 순차 접수(건축허가 동의 및 소방시설 착공신고) / 익일처리 **안성(1곳) / 이천(1곳) / 용인(5곳) / 여주(1곳)** → **일사천리 광역민원센터(8곳)** 민원처리 약 30일 소요 → 일괄 민원처리 2일(28일 단축) 활용전 〈관할 소방서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활용 후 〈본부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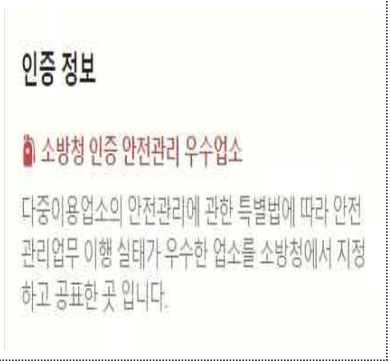
		[울산 S-Oil사인 프로젝트] **"전담 행정업무처리 지원"** • 신속하고 합리적인 기술지원을 위해 **민·관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업장 및 소방관서의 **전담 행정업무처리 지원** ※ 총 9명(소방청·본부·기술원) → 사업종료 시 까지 소방시설, 위험물시설 인·허가 관련 사전협의 등 신속처리 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추진 시 문제해결을 위한 단계적 서비스 운영 및 신속한 피드백 ➲ Step1 : 계획·중간설계 컨설팅, Step2 : 첫만남서비스, Step3 : 행정서비스 빠른 피드백 - 국가·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대*, 장치정비 및 물류 등 경제 활성화 ➲ 고용 일자리 창출(약 17,000명), 경기 활성화(약 3조원), 세수 증대(지방세 약 330억) **[기관장 현장]** **"관계자 건의사항 청취 및 개선방향 점검"** ('24.5.20.) - 국가첨단산업체 원스톱 119지원단 주요 **추진결과 및 운영현장 점검** ▸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 규제개혁 및 신속처리 - SK하이닉스(주) 관계자 **건의사항 등 의견 청취** ▸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초기단계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효과[13] 및 미담사례[14]	⇨ **신속한 민원처리로 기업경쟁력 확보에 일조 및 국민신뢰 확보** - **(경기)** 민원 일괄처리 및 처리기간 28일 단축으로 신속한 공사 추진 기존 각 관할 소방서 방문 최소 '30일' 소요 → 개선 **본부 처리 2일(처리기간 28일 단축)** - **(용인)** 사업종료까지 전담직원 배치로 신속한 피드백 가능 **[원스톱119지원단 운영실적]** **"513건 업무처리"** ※'24.1.1~4.30.(4개월간) - [사전컨설팅-78건] 국가성장동력산업 대상에 대한 **인허가 기간 단축** - [인·허가-78건] 업무담당자 일원화 등 국가첨단사업의 **신속한 민원처리** - [소통창구-220건] 합리적 기술지원을 위해 **민관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구성** - [법령해석-71건] 석유화학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위험물 민원지원** 강화 - [기타] 투자기업의 차질없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기업 현장 지원** **[제도개선] 혁신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부서협력)** - 반도체 관련 **성능위주설계** 전문가 구성 및 **가이드라인** 제정 - 반도체 제조공정 관련 **위험물시설 특례기준** 마련 - 국가첨단전력기술 관련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 규정 마련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인원 완화(법령해석)

사례번호 ⑬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적극행정 우수사례(2)

<table>
<tr><td colspan="2">사례제목[1]
(정책명[2])</td><td>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NAVER에서 확인하세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정보 네이버 검색서비스 제공)</td></tr>
<tr><td colspan="2">사례요약[3]</td><td>-「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인증해주고 있음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는 영업주 의무이며, 안전관리 독려를 위해 우수업소 인증 제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효과가 미미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 추진 필요</td></tr>
<tr><td colspan="2">기관명[4]
(부서명)</td><td>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td></tr>
<tr><td rowspan="2">분야[5]</td><td>1차</td><td>규제혁신 여부 Y □ N ■</td></tr>
<tr><td>2차</td><td>역동적 경제 □ 살기좋은 대한민국 ■ 담대한 미래 □ 따뜻한 동행 □
기타 □ (직접입력 :)</td></tr>
<tr><td colspan="2">공적자[6]</td><td><table><tr><th>구분</th><th>부서명</th><th>직급</th><th>성명</th><th>연락처</th></tr><tr><td>주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tr><td>부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tr><td>부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table></td></tr>
<tr><td colspan="2">각종대회 수상실적[7]</td><td></td></tr>
<tr><td colspan="2">가점대상 여부[8]
(입증자료 필수)</td><td>국민추천사례(+3점) □ 사회적 재난 대응(+3점) □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3점) □ 협업사례(+3점) □</td></tr>
<tr><td colspan="2">기타 해당 여부[9]</td><td>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사례 ■ 기관 중점 추진과제 □
위원회 1회, 24년 상반기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제출(24.06.24)</td></tr>
<tr><td>사례내용</td><td>상황[10]</td><td>-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27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다중이용업소는 총 169,392개소이다. 이 가운데 전체의 약 0.8%인 1,408개소가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인증받음
-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은 프랜차이즈, 휴게음식점 등 비교적 깨끗하고 관리가 잘되는 업소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은 영업장의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혜택 제공 및 인식 개선을 통해 인증 신청 독려 필요
- 특히 고시원업, 산후조리원업과 같이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및 키즈카페 등 다른 업종 보다 안전이 중요하고 안전도가 영업장 선택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영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업무 독려 방법 필요</td></tr>
</table>

<table>
<tr><td></td><td>난관[11]</td><td>- 네이버와 업무협의 결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정보를 데이터로 변환하여 API 형태로 네이버에 제공해야 하나 이를 구축하기 위한 소방청에서 구축한 시스템이나 예산이 없어 방안을 모색 중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OpenAPI*로 제공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협업 추진함
* Open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구조화된 데이터(XML)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한 개방형 데이터 제공 채널</td></tr>
<tr><td></td><td>적극[12]</td><td>- 안전관리 우수업소 제도는 영업주의 자율안전관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으로 네이버 통합검색 및 지도 서비스에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은 영업장의 안전관리 정보를 확인하고 방문할 수 있게 됨
<table><tr><th>활용 전</th><th></th><th>활용 후</th></tr><tr><td>·우수업소 인증 표지 부착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면제</td><td>⇨</td><td>·기존 제도 유지
·네이버 검색(지도) 우수업소 정보 표출로 영업장 안전도를 홍보할 수 있는 혜택 부여</td></tr></table>우수업소 정보 제공 예시

</td></tr>
<tr><td></td><td>효과[13] 및 미담사례[14]</td><td>-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데, 최근 들어 영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영업주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전에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안전한 영업장이 이용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 네이버 검색 시 영업장 안전도가 표출된다는 홍보 효과에 대해 언론보도, SNS를 통해 알리고 있고, 신청하는 영업주가 늘어나고 있어 제도를 활성화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됨</td></tr>
</table>

사례번호 ⑭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적극행정 우수사례(1)

<table>
<tr><td colspan="2">사례제목[1]
(정책명[2])</td><td colspan="5">국가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 개선 위험물 관리 규제 혁신
반도체·이차전지 제조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공정 특례 신설</td></tr>
<tr><td colspan="2">사례요약[3]</td><td colspan="5">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성 제고에 더해, 반도체 및 이차전지 제조를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의 설비기준 완화 특례 규정을 두어 신속한 민원처리 및 비용감소 도모함</td></tr>
<tr><td colspan="2">기관명[4]</td><td colspan="5">소방청 화재예방국 위험물안전과</td></tr>
<tr><td rowspan="2">분야[5]</td><td>1차</td><td colspan="5">규제혁신 여부 Y ■ N □</td></tr>
<tr><td>2차</td><td colspan="5">역동적 경제 ■ 살기좋은 대한민국 □ 담대한 미래 □ 따뜻한 동행 □
기타 □ (직접입력 :)</td></tr>
<tr><td colspan="2" rowspan="2">공적자[6]</td><td>구분</td><td>부서명</td><td>직급</td><td>성명</td><td>연락처</td></tr>
<tr><td>공적자</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각종대회 수상실적[7]</td><td colspan="5">해당없음</td></tr>
<tr><td colspan="2">가점대상 여부[8]
(입증자료 필수)</td><td colspan="5">국민추천사례(+3점) □
사회적 재난 대응(+3점)
협업사례(+3점) ■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기획재정부 정책조정과/'23.11.8.),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 방안(기획재정부 정책조정과/'24.3.28.)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3점) □</td></tr>
<tr><td colspan="2">기타 해당 여부[9]</td><td colspan="5">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사례 □
기관 중점 추진과제 ■
정부혁신 종합계획 전략과제</td></tr>
<tr><td rowspan="2">사례내용</td><td>상황[10]</td><td colspan="5">종전의 위험물시설 기준은 이차전지 산업 발달 전에 규정되어 이차전지 공정에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이차전지 공정의 특수성에 따른 위험물 허가의 반복적 특례 심사로 허가 지연(약 3개월) 및 행정력 낭비(최근 5년간 특례 심사 중, 약 24% 차지) 요소가 있어 해소가 필요함</td></tr>
<tr><td>난관[11]</td><td colspan="5">반도체·이차전지 제조공정 시설은 일부에서 위험물(발화·인화성 물질)을 취급하지만 건물 전체가 일반 위험물 제조시설과 동일한 안전 규제를 준용받고 있음(위험물법 시행규칙 별표4 제조소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
※ 설치허가 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안전성 평가 승인에 3~6개월 추가 소요, 1억원 이상 평가 비용 발생 → 공사기간 연장 및 투자비용 증가
(최근 5년간 일반특례 심사중 22.7%가 반도체 공정 위험물시설 허가심사)
위험물을 취급함에 따라 반도체 공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취급소로 허가 받고 있으나, 반도체 공장 특성상 9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을 만족할 수 없거나, 관할소방서마다 상이하게 해석되어 라인(건축물)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마다 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법적 기준과 동등이상의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인정받고 있다. 이와 같이 위험물을 취급하는 반도체공장의 클린룸은 건물마다 동일한 구조임에도 동일한 안전성평가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등 행정적인 지연이 곧 반도체 시장 대응 지연으로 이어져 번번이</td></tr>
</table>

		공정의 차질 및 경제적 손실발생으로 나타남.
	적극[12]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시장에서 기술혁신과 생산 확대에 주력할 수 있도록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 필요하여 반도체 클린룸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를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현행 위험물 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선하는 개별특례 기준 신설 - 종전 위험물을 일부 장소에서 소량 취급하더라도 공장건물 전체에 대해 위험물 제조소의 엄격한 구조·설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24.5.20.)하여 별도로 국가첨단산업 이차전지 특례기준을 신설·규제 완화 - 벽·기둥·바닥 등 주요 구조부, 유리 종류, 바닥경사 및 배관재질 등 산업 제조공정에 특화된 위험물 취급소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 마련 ※ (民)위험물 취급소 허가신청 → (官)허가심사 및 허가처분) → (民)위험물 취급소 설치공사 및 완공 → (官)완공된 위험물 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기준 적합성 검사, 완공검사합격처분    1. **(지붕)** 반도체공정의 특성상 공장 옥상(지붕부)에 공조설비 등 중량물의 대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붕은 내력구조의 내화구조를 사용하고 있음 2. **(벽)** 반도체 공장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와 반도체 제조를 위한 유틸리티 시설(전기실, 공조실)이 인접하여 설치되는 복합건축물로, 취급하는 장소와 미취급 장소간 내화구조의 벽체와 방화구획으로 구분되어 있고, 반도체공정상 클린상태, 내화재료, 법규이상의 소방시설등이 설치되어 있어 돌출방화벽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3. **(유리)** 반도체공장은 대규모 면적으로 방화구획을 구성하고 있으며 방화구획 선상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방화문 설치하여야 하고 당해 문에 설치되는 유리는 건축법상에는 방화성능,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망입유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글로벌업체에서는 화재시 피난을 위해서 투명유리가 설치된 방화문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4. **(경사)** 클린룸은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비가 설치되는 장소로써 바닥면이 공기를 정화하기 위한 기류가 통과할 수 있는 타공판/Graitng 구조로 되어있어 집유설비 설치가 어렵고, 반도체 생산설비는 평행 유지가 필요한 설비로서 바닥에 적당한 경사를 두

기 어려움. 단, 타공판 하부층에 적당한 경사와 집유설비를 설치하고 있음.

5. **(환기)** 반도체 공정 특성상 파티클 이슈로 청정지역인 클린룸으로 운영하여 자연환기 적용은 어려워 공기정화시스템(공조설비)에 의해 강제 급·배기 방식의 설계로 운영함.
6. **(배관)** 위험물 중 부식성이 있는 초산 등 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은 내부식성 및 내화성이 우수한 PFA재질의 배관을 사용하고 있으나 PFA 재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해당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사용기준 포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4.5.20.)>

	종 전	현 행
벽·기둥·바닥 등	불연재료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
지붕	폭발력 상부 방출을 위해 가벼운 불연재료	가벼운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가연성증기의 체류 방지조치를 한 경우)
유리 종류	망입유리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
경사 여부	경사를 둘 것	누출 위험물의 유출방지조치를 한 경우 경사 면제
환기·배출설비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 외에 다른설비 설치 불가	국내·외 관련기준에 적합한 공조설비 설치시 환기설비·배출설비 갈음
배관 재질	금속성 또는 폴리우레탄 등	금속성 또는 폴리우레탄 등 또는 PTFE

효과[13] 및 미담사례[14]

국내 이차전지 산업 육성정책 지원을 위한 관련규제 적극 완화하기 위해 반도체 공장의 특수한 구조를 인정하는 특례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활동 지원과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

- 위험물 취급 관련 소방 인허가 기간 단축(6개월),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이차전지 기업들의 원활한 생산시설 투자 기대

신기술이 급속도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직적인 기술규제를 유연화하고 신기술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하여 공장 건설시 일반취급소에 대한 일반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제조공정에 특화된 위험물 일반취급소 안전기준 특례 신설 규제 혁신

시행 전	시행 후
○ 기존「위험물법」일반 규정 적용	○ 제조공정 특화 안전기준 특례 신설
○ 소요시간에 따른 허가 심사기간 지연	○ 신기술의 신속한 도입 기반 조성 지원
○ 산업 공정라인 조기가동 문제 우려	○ 현장속으로 뛰어들어 실질적 문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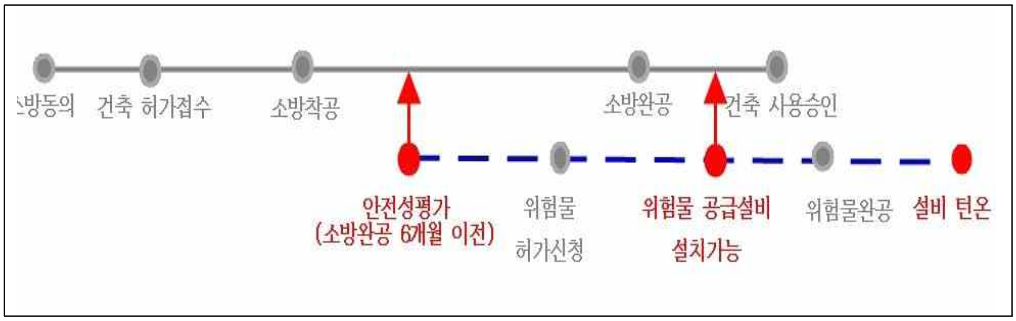
반도체 산업은 국가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중국과의 기술우위를 지속적으로 확

보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기술혁신과 지원에 총력을 펼치고 있음

최근 한국 수출액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은 933억4천만 달러로서 수출액 1위를 차지하고 있음 미국의 반도체 기업 집중 지원과 대만과 중국 역시 반도체 기업 육성을 경주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로서는 경쟁력 우위를 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 및 관련 기관의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때임.

신설된다면 더 이상 반복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므로 소방완공 전 6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을 공정 진행에 주력하여 단축 가능

<위험물 설치 인허가 공정표>



안전성평가는 처리기간이 30일이지만, 평가 심의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준비하는 기간만 최소 60일 이상이 소요되며,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즉시 평가심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심의일정 및 자료 검토, 준비 및 심의 실시 후 결과서 교부시까지는 최소 100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함 또한 심의과정에서 평가 불합격 등의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는 200일까지도 소요되기 때문에 공급설비 설치 및 턴온을 위한 적정시기와 겹쳐 공정에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설비 턴온(turn on)까지의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공정 운영에 상당한 효과 발생

※ 규모 : LG에너지솔루션 오창(4,000억원), SK온 서산(1조 5,000억원) 등

< 위험물 규제 혁신 사례 >



사례번호 ⑮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적극행정 우수사례(2)

<table>
<tr><td colspan="2">사례제목[1]
(정책명[2])</td><td colspan="6">국민에게 밀접한 위험물 규제를 개선하여 불편사항을 해결하다
셀프주유 및 이동주유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td></tr>
<tr><td colspan="2">사례요약[3]</td><td colspan="6">화재·폭발 등 사고 우려하여 셀프주유소에서 1회 주유량 및 주유시간 엄격하게 제한 하였으나 합리적으로 완화하였으며, 재난현장에서 재난차량 이동주유를 제도적으로 허용하여 화재현장에서 연속성을 제고함</td></tr>
<tr><td colspan="2">기관명[4]
(부서명)</td><td colspan="6">소방청 화재예방국 위험물안전과</td></tr>
<tr><td rowspan="2">분야[5]</td><td>1차</td><td colspan="6">규제혁신 여부 Y ■ N □</td></tr>
<tr><td>2차</td><td colspan="6">역동적 경제 □ 살기좋은 대한민국 ■ 담대한 미래 □ 따뜻한 동행 □
기타 □ (직접입력 :)</td></tr>
<tr><td colspan="2" rowspan="2">공적자[6]</td><td>구분</td><td>부서명</td><td>직급</td><td>성명</td><td colspan="2">연락처</td></tr>
<tr><td>공적자</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각종대회 수상실적[7]</td><td colspan="6">해당없음</td></tr>
<tr><td colspan="2">가점대상 여부[8]
(입증자료 필수)</td><td colspan="6">국민추천사례(+3점) □
사회적 재난 대응(+3점) □
협업사례(+3점) ■
소상공인 규제·애로 건의 검토(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 ’24.1.16.), 재난현장 소방차량 이동주유 예외적 허용 조정회의(국조실, 산업부 / ’23.1.)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3점) □</td></tr>
<tr><td colspan="2">기타 해당 여부[9]</td><td colspan="6">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사례 □
기관 중점 추진과제 ■
2024년 소방청 주요업무 추진계획</td></tr>
<tr><td rowspan="2">사례내용</td><td>상황[10]</td><td colspan="6">1. 종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ⅩⅤ에서는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셀프용 주유기는 1회 주유량 및 주유시간 상한(휘발유 100리터 이하, 경유 200리터 이하, 주유시간 4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일반국민들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불편함이 있었음

(사례) △△주유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M씨는 화물차량 운전자로부터 두세번에 걸쳐 주유를 해야하는 현행 규제에 대한 고객 불만을 자주 접하고 있음. 이에대해 M씨는 실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해당 규제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고 불편사항 호소

2.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이동주유가 금지되어 소방차량 이동주유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석유사업법 위반에 해당

‣ (위험물안전관리법)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연료탱크에 주입하지 말 것”(시행규칙 별표18)
‣ (석유사업법) 주유소·일반판매소가 이동판매 방법(5kL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으로 판매할 수 있는 대상에서 “자동차 제외”(시행규칙 제2조의2)</td></tr>
</table>

난관[11]

1. 일반적으로 현재 대다수 화물차의 연료탱크 용량이 200리터를 초과한 주유기에서 여러번 주유할 경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의심되어 불이익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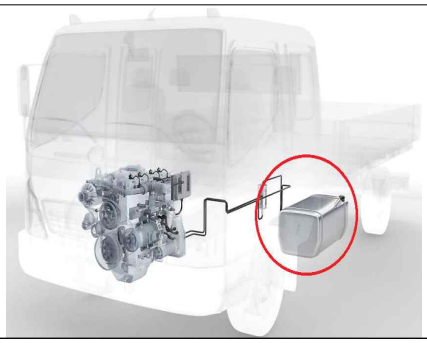
- 대형화물차, 건설기계의 경우 주유량이 200리터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법에서 규정한 1회 주유량 상한을 넘어 3회에 나누어 주유를 해야하고 1회 주유시간이 4분을 초과해 주유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함 이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주유소에 불만을 호소하고 좁은 주유소 내에서 대형화물차 등이 장시간 정차하여 주유를 함으로 인해 다른 차량이 주유를 하지 못하는 등 주유소 운영에 큰 차질을 초래하여 경영에 악영향을 초래함

제조사	차종	연료탱크 용량(리터)
현대	에어로시티(버스)	300(옵션 +200)
	메가트럭(4.5톤/ 5톤)	250
	뉴 파워트럭(15톤)	300(옵션 +200)
기아	뉴그랜버드(버스)	400
스카니아	덤프(15톤)	300~400
볼보	덤프(15톤)	255~450

- 정부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동일 주유소에서 단시간 내 반복 결재시 부정수급 의심 거래로 판단하고 화물차주에 대한 조사는 물론 해당 주유소에 대해서도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부정수급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2회 이상 주유를 원하지 않으며 부정 수급 의심 거래로 판단되는 주유소에 대한 현장단속시 자료제출 및 소명 등이 미비한 경우 5년간 유가보조금 거래정지와 주유소 운영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하고 있음
- 기술발전 및 운송효율성 중시에 따라 화물차 연료탱크의 대형화(200 ~ 500리터)로 일반인(화물차주)이 셀프주유소 이용시 1회 주유로 완충이 불가하며,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 지급 절차상 일일 다회 주유시 일일 주유량 상한*에 대해 소명절차가 필요함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차량별 실제 탱크용량 이상 충전시 보조금 지급이 제외되며, 화물운송자가 직접 인터넷(앱)에 용량신청을 해야함 (민원 주요사유)

화물차 연료탱크 사진





2.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이동주유가 금지되어 소방차량 이동주유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석유사업법 위반에 해당

- 대형 산불 등 재난 대응에는 장시간이 소요되어 현장 소방차량의 연료 소진 및 보충이 불가피하여 소방차량 화재진압 중 연료소진 시 주유 후 복귀에 따른 현장 애로

< '22년 도내 장시간 화재진압 사례 >

· 기간/장소 : '22. 2. 16.(수) 02:18 ~ 2. 17.(목) 14:30(주불 진화) / 영덕군 소재
· 동원차량 : 216대(소방차량 130, 진화 45, 기타 43)

· 기간/장소 : '22. 3. 4.(금) 11:17 ~ 3. 13.(일) 09:00(주불 진화) / 울진군 소재
· 동원차량 : 2,927대(소방차량 2,427, 기타 494)

· 기간/장소 : '22. 5. 28.(토) 12:06 ~ 5. 29.(일) 15:14(대응단계 해제) / 울진군 소재
· 동원차량 : 226대(소방차량 138, 진화 61, 기타 27

※ 연료소모 시간 추정(중형펌프, 연료탱크 250L 기준, 운행시간 제외 펌프만 기동 시) 약 8L/Hr, 연료 만충 시 약 30시간 가동

- 주유 후 복귀차량의 현장 재배치 등 화재진압의 연속성·효과성 저해 (화재진압에 수일이 소요되는 대형 산불 또는 대규모 화재현장의 경우 현장활동에 동원되는 소방차 등 긴급구조지원차량의 연료는 통상적으로 30시간마다 소진)

- 이동주유가 금지되어 있던 탓에 인근의 주유소를 찾아 연료를 보충하고 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산불 현장의 대부분은 산길을 지나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주유소가 위치하고, 이동에만 왕복 1~2시간이 소요되기도 함 당시 산불은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3천 대가 넘는 소방차량들 역시 해당 규제로 원거리 주유소에서 주유 후 복귀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화재진압 연속성도 저해됨.







- 산불 및 대형폐기물 화재 등 작업에 장시간 소요되는 대규모 재난현장에서 중단없는 소방차량 운영을 위한 원활한 연료 보충 필요

☞ 연료보충을 위해 소방차의 현장이탈 운행시, 출동된 차량들의 재배치에 따른 시간 소요로 화재진압이 늦어짐.

※ 연료소모 시간(중형펌프, 연료탱크 250L 기준, 운행시간 제외 펌프만 가동시)
- 약 8L/Hr, 연료만충시 약 30시간 가동

- 최근 2년간 5,712건의 전체 화재건수 중 장시간(3시간 이상) 작업한 화재건수는 172건(경북기준)으로 전체 화재의 3%정도 이지만 실제 장시간 화재진압을 하여도 연소확대가 없는 폐기물 화재시 조기 완진으로 처리하는 사례 있어 실제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추정

	적극[12]	1. 위험물법 시행규칙 개정('24.5.20.)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규제 완화 - 휘발유의 경우 경유보다 화재 위험성이 높고 특별히 100리터 이상 주유에 대한 고객 수요도 없는 바 1회 주유량 상한을 현행을 유지하되, 경유의 경우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화물차 대다수가 200리터를 초과함에 따라 주유소 운영 현실을 고려하여 셀프용 주유기 경유 1회 주유량 상한을 600리터 이하로 완화 2. 위험물법 시행규칙 개정('24.5.20.)을 통하여 재난현장 이동주유 허용 - 지자체, 신문고에 재난현장 소방차량 이동주유 허용 건의('22.9)→소방청, 신문고 건의 수용 회신('22.9)→산업부, 소방차량 이동주유 불허 회신('23.1)→조정회의('23.1)에서 소방차량 이동주유 예외적 허용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해 소방청-산업부 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 출동하여 재난대응 활동 중인 소방차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출동차량은 주유소 등으로 이동하지 않고, 재난현장에서 직접 주유하는 것이 가능토록함
	효과[13] 및 미담사례[14]	1. 주유소 14,612개소(소방청 통계) / 화물차 3,724,407대(국토부 통계) - 합리적 위험물 규제로 주유소 운영자 및 화물차 고객 불편사항 해결함 ※ (언론) "대형 경유 차량 희소식, 경유 주유량 제한 600L로 확대" / 연합뉴스 등 2. 대형 재난현장에서 연료 주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해야 하는 대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현장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 2022년 △△산불 10일간(213시간 소요) 2,927대 소방차량 동원

< 이동주유가 허용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차량의 종류 >

1.「소방장비관리법」제8조에 의한 기동장비 중 소방자동차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지원된 자동차

3. 기타「소방기본법」제2조제6호에 따른 소방대장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출동대의 장이 현장에서 지정하는 자동차

사례번호 ⑯

소방청 생활안전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table>
<tr><td colspan="2">사례제목[1]
(정책명[2])</td><td colspan="5">“일하러 나갔다가 안와서 가봤더니…” 신고하지 못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단독사고 이젠 그만!
(농촌 안전사고 저감 대책 추진)</td></tr>
<tr><td colspan="2">사례요약[3]</td><td colspan="5">1. 농촌 안전사고 세부 분석(농기계 사고, 농약중독, 뱀물림 등)
2. 소방청-농진청 농업인 안전교재 공동 제작 및 안전교육 제공
3. 반복적이고 사고 예방이 가능한 농기계 개선 추진
4. 승용 농기계 ‘사고 알람 단말기’ 시스템과 119상황실과 대응체계 협업</td></tr>
<tr><td colspan="2">기관명[4]
(부서명)</td><td colspan="5">소방청
(생활안전과)</td></tr>
<tr><td rowspan="2">분야[5]</td><td>1차</td><td colspan="5">규제혁신 여부 Y □ N ☑</td></tr>
<tr><td>2차</td><td colspan="5">역동적 경제 □ 살기좋은 대한민국 ☑ 담대한 미래 □ 따뜻한 동행 □
기타 □ (직접입력 :)</td></tr>
<tr><td colspan="2" rowspan="2">공적자[6]</td><td>구분</td><td>부서명</td><td>직급</td><td>성명</td><td>연락처</td></tr>
<tr><td>주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각종대회 수상실적[7]</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가점대상 여부[8]
(입증자료 필수)</td><td colspan="5">국민추천사례(+3점) □ 사회적 재난 대응(+3점) □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3점) □ 협업사례(+3점) ☑ 농촌진흥청</td></tr>
<tr><td colspan="2">기타 해당 여부[9]</td><td colspan="5">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사례 □ 기관 중점 추진과제 ☑
농촌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td></tr>
<tr><td rowspan="3">사례내용</td><td>상황[10]</td><td colspan="5">○ ’23년 농기계 사고 1,735건 중 심정지 91건 발생, 이 중 사고 후 시간이 지나 발견된 건수가 59건(64.8%)으로 신고를 못한 경우가 많음
○ ’22년 전체 이송시간이 10분 이내가 가장 많다가 줄어드는 반면 농촌 사고는 11분부터 점차 늘어나 31~60분 이내가 33.1%로 가장 많음
➡ 사고로 인한 손상이 크고 위치상・연령상 현장대응이 취약함</td></tr>
<tr><td>난관[11]</td><td colspan="5">○ 기존 사고분석자료*는 사고 원인 및 농기계별 세부사고현황 부재
* 지역별·중증도별·월별·장소별·사고유형별로만 분류/표본조사로 전체 통계
○ 농업인 대상 교육과정이 주로 농기계 사용으로 이루어져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공통 교재 필요
○ 승용농기계 전복 시 ‘사고 알람 단말기’ 시스템과 소방청 119상황실 간 비연계 상태</td></tr>
<tr><td>적극[12]</td><td colspan="5">❶ 농촌 안전사고 세부 분석 및 예방 홍보
- ’22~’23년 농기계 사고 3,428건, ’23년 농약중독 337건, ’22년 뱀물림 816건 세부분석(지역별・월별・장소별 등 기본분석+사고원인・사례분석)
- 농촌 안전사고 예방홍보 자료* 제작 및 양 기관 누리집에 게재
* 농기계 사고·농약중독·뱀물림·온열 손상 등</td></tr>
</table>



농기계 사고 교육자료



농양중독사고 교육자료



뱀물림 사고 안전상식

❷ 농촌진흥청과 **부처협업 계획 수립**

- 농진청과 업무 협업을 위해 3차례 회의진행('23.9월, '23.10월, '24.2월)
- 농촌 생활안전사고 저감 대책 수립

사고정보 체계화	▶ **사고정보 기초자료 구체화** -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분류하기 위해 항목 추가 및 분리 ▶ **농촌안전사고 분석 고도화** -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한 정보 활용기반 구축 ▶ **홍보 강화로 경각심 고취** - 주로 농기계 사고에서 다양한 농촌 안전사고로 확대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 **안전교육 프로그램 강화** - 표준화된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교육 운영 ▶ **업체 협력으로 농기계 개선** - 관련 업체와 사고정보 공유로 농기계 개선 ▶ **관계부처와 신속대응 구축** - 농촌진흥청과 스마트 워치 등을 활용한 대응체계 협업

❸ 소방청-농촌진흥청 **「농업인 안전교재」 공동 제작 및 안전교육 제공**

- 표준화된 농촌 안전교재 강사용·교육생용 제작
- 전국 139개 교육기관(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과정에 소방안전강사* 교육 제공

* 전국 소방서에 총 1,891명의 소방안전강사가 농업안전교육 제공

구 분	교 육 내 용
기본 교육	• 계절별·장소별·지역별 안전사고 통계수치로 경각심 고취
안전 예방	• 농촌생활 속 안전사고 사례 ⇒ 예방의식 향상 • 농기계의 경우 기계별 구체적 사례 제시 • 화재예방, 사고 발생 예방법, 증상 및 징후
사고 처치	• 119에 신고하는 방법(위치, 증상, 현장 처치 등) • 기본 처치술: 환자평가, 지혈, 쏘임/물림 처치, 온열질환자 처치술, 중독환자 처치술, 환자 이동/자세 취해주기 등 • 전문 처치술: 심폐소생술 등

❹ 반복적이며 사고 예방이 가능한 **농기계 개선 추진**

- 예방이 가능한 농기계 사고사례를 분석 후 **농촌진흥청과 농기계 협동조합과 워크숍을 통해 농기계 개선**(7월 회의/8월 워크숍 예정)



추레라 탑승금지 등



안전장치(안전벨트) 미착용



경운기 손잡이 (끝부분 뾰족함)

-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위치에 비상정지버튼 설치**하는 것으로 개선 요청
- 농기계 제작시 끼임사고 등 **사고 발생부위 해체 요령 QR코드 제작 및 부착**

❺ 승용농기계 **'사고 알람 단말기' 시스템과 119상황실 대응체계 협업**

- **기존** 승용농기계 전복→사전 연락처에 문자 송부→지정 담당자가 유선 또는 현장 확인→119 신고→119 출동 **(대응시간 지연)**
- **협업** 승용농기계 전복→사전 연락처와 119상황실에 **동시 문자송부** →지정 담당자가 확인과 **즉시 119 출동 (사고 발생 동시 대응)**

※ 사고 빈도 및 단말기 보급수량이 많은 전남소방본부에서 시범운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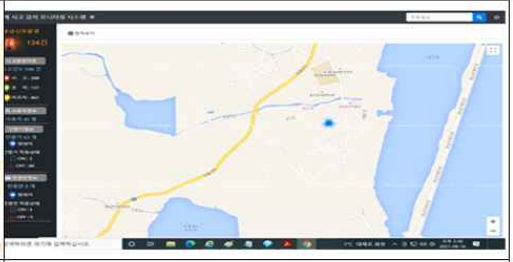
〈농업기계 사고감지 시스템 구조도〉



〈사고감지 단말기 부착, 트랙터, 경운기〉



〈제3자 정보전달(휴대폰 App., 문자서비스)〉



〈PC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효과[13] 및 미담사례[14]

- 농촌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률을 저감함에 따라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젊은세대의 농촌 유입 기대
- '농기계 사고 알람 단말기 시스템' 시범사업으로 신속 대응 등을 통해 안전한 농촌생활 지원
- 소방청과 농촌진흥청의 협업으로 전국 139개 농업인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전문적인 교육으로 농축산업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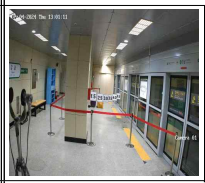
사례번호 ⑰

소방청 장비총괄과
적극행정 우수사례(1)

<table>
<tr><td colspan="2">사례제목[1]
(정책명[2])</td><td colspan="6">극한의 재난환경에서도 국민을 구조하고 안전하게 복귀하라
(최고 성능의 첨단 소방장비 도입 추진)</td></tr>
<tr><td colspan="2">사례요약[3]</td><td colspan="6">□ 건물 내부 화재 등 극한 환경에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열화상 장비와 대원위치추적 및 생체신호 취득 장비가 도입되고 있으나, 환경이 양호한 소수의 현장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이에 현장의 정보를 우선 취득·활용하여야 할 대원의 헬멧 등에 결착 가능한 첨단 영상장비(열화상 및 연기투시용 시야개선 장비)를 도입하여 위험에 처한 국민과 현장대원의 안전 확보.</td></tr>
<tr><td colspan="2">기관명[4]
(부서명)</td><td colspan="6">소방청
장비총괄과</td></tr>
<tr><td rowspan="2">분야[5]</td><td>1차</td><td colspan="6">규제혁신 여부 Y □ N ■</td></tr>
<tr><td>2차</td><td colspan="6">역동적 경제 □ 살기좋은 대한민국 ■ 담대한 미래 □ 따뜻한 동행 □
기타 □ (직접입력 :)</td></tr>
<tr><td colspan="2" rowspan="4">공적자[6]</td><td>구분</td><td>부서명</td><td>직급</td><td>성명</td><td colspan="2">연락처</td></tr>
<tr><td>주 공적자</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부 공적자</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부 공적자</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각종대회 수상실적[7]</td><td colspan="6">없음</td></tr>
<tr><td colspan="2">가점대상 여부[8]
(입증자료 필수)</td><td colspan="6">국민추천사례(+3점) □ 사회적 재난 대응(+3점) □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3점) □ 협업사례(+3점) □</td></tr>
<tr><td colspan="2">기타 해당 여부[9]</td><td colspan="6">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사례 □ 기관 중점 추진과제 ■
※ 출동대원 실시간 안전관리시스템 도입</td></tr>
<tr><td rowspan="2">사례내용</td><td>상황[10]</td><td colspan="6">○ 재난 현장에서 위험에 처한 국민과 대원 생명의 위해 요소
- 현장의 짙은 연기와 암흑 등으로 인한 시야 미확보
- 현장 상황 인지의 어려움과 장비휴대로 자유롭지 못한 양손
※ 경북 문경 순직사고('24. 1. / 2명) : 급격한 연소확대 시야확보 제한(사고조사단 조사분석 결과)
전북 김제 순직사고('23. 3. / 1명) : 탈출 방향 잃은 대원들 고립·순직(중앙사고합동조사단 조사결과)
경기 평택 순직사고('22. 1. / 3명) : 개인안전장비 활용 미흡(사고조사위원회 조사분석 결과)</td></tr>
<tr><td>난관[11]</td><td colspan="6">○ 건축물 내부 화재 현장은 짙은 연기와 암흑 등으로 가시거리가 짧아 효과적인 대원의 현장 활동과 인명구조 활동에 제약
- 現 해외에서는 양손 활용 가능한 열화상 장비가 개발되었으나, 국내 도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성능검증 추진사례 전무.</td></tr>
</table>

		○ 최근 화재 및 인명구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대응을 위해 **대원들의 위치정보가 필요하나** 현재는 **기술적 제약으로 불가** - 위치정보 실현을 위해서는 'GPS, BLE, UWB, Wi-Fi, 정밀 위치측위' 등 **최첨단 기술의 복합적인 구현이 선행**되어야 함. - 現 연구 개발단계로서 全 세계적 **실효적 상용 제품 부재**
	적극[12]	**【최근 개발 대원보호장비 시연(1차 검토)】** ○ **(대원위치추적 및 생체신호) 국내 제조사 3개, R&D 개발품 2개** - 통신환경이 양호한 일부 소방현장(산악 구조 및 붕괴건물)에는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나 **대다수 소방 현장에서는 외부 현장지휘소와의 정보 전송 불가**(통신비용도 발생) ❶ **(경기 개발사업*) "스마트 안전관리서비스 플랫폼 개발"** * 주관기관 **경기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19.9.~'20.5. / 24.3억) ❷ **(다부처 R&D*) "스마트 인명구조 경보기와 웨어러블 손목밴드**를 활용한 **통합 안전관리 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결과 확인** * 주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22.10.~'24.9. / 6억) ❸ **(소방청 R&D*) "소방대원 생체신호를 활용한 실시간 안전관리시스템" 기술개발** * 주관기관 **보건안전담당관**('22.4.~'24.12. / 28억) ○ **(영상취득) 국내 제조사 1개, R&D 개발품 1개, 해외 제조사 2개** - **연기투시 장비**는 **시야 개선 영상처리 기술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장비사용 시 양손의 활용이 불가하여 **편리성 개선이 필요**함 - **헬멧 부착 열화상 카메라**는 면체 내부 디스플레이로 영상 확인이 가능하여 **편리성과 대원 안전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現 사용 국산 면체와 해외 제작사 장비간 호환이 되지 않음**  장비(국내 미시판)  장비소개   제품 착용 및 시연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성능검증 시연회(2차 검토)】** ○ **(참석) 소방청장 등 160명**(7. 3 / 91명, 7. 4 / 103명) * 소방청 12, 연구원 6, TF 14, 서울학교 7, 시·도 35, 소방노조 10, 시연업체 18개사 76명 ○ **(시연대상) 시야개선·대원위치추적·생체신호 관련 18개사 20개 장비** ※ 대상선정 : 공고 및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여업체 대상 신청서 접수

○ (시연환경) 장비 성능검증 위한 농연·암흑·통신 통제 가능 장소

대원 생체신호·위치추적 장비		대원 시야개선 장비		
				
< 지하 40m >	< 터널내부 100m >	< 시연 전 >	< 연기밀도 50% >	< 연기밀도 75% >
▸시연장소 : 서울 신림 - 봉천 터널 ▸시연환경 : **지하터널 內 통신 불가 현장**		▸시연장소 : 서울소방학교 종합훈련타워 지하 2층 ▸시연환경 : **조명 無 / 짙은 연기 현장**(연기밀도 732 ~ 996%)		

○ (시연결과) 붙임참조 → 8월 심포지엄 개최 후 최종 결과 보고예정

【소방대원 첨단 보호장비 개발 심포지엄 추진 - '24. 8월 예정】

○ (목 적) ❶ 기술적 지향점 및 개발 모델 제시 **심포지엄 시 검증결과 반영**

❷ 성능검증 결과, 자문팀 의견 반영 **개발장비** 및 **우선순위 확정**

○ (일 시) '24. 8. 27.(화) 14:00

○ (참 석) 200여 명(카이스트, 포항공대 등 12개 기관 교수(연구원) 등)

시 간		주요 내용
13:30~14:00	30′	▪ **참석자 등록 및 개회**
14:00~14:05	5′	▪ **인사말씀**
14:05~14:25	20′	**초청 강연 : 소방 연계 첨단기술 소개**
14:25~14:35	10′	▪ **소방대원 첨단보호장비 개발 추진 사항 발표**
14:35~15:15	40′	**(1부) 대원 위치추적 및 생체신호 측정 기술** ▸**위치추적 및 생체신호 실증결과** 발표 **및 적용 기술 논의 등**
15:15~15:55	40′	**(2부) 대원 시야 확보 및 요구조자 식별 기술** ▸**시야 확보 장비 실증 결과** 발표 및 **개발 동향 등**
15:55~16:00	5′	▪ **행사 정리**

미담사례[14]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성능검증 시연회(7.3 ~7. 4)】

○ (전문가) **"장비 성능 검증할 수 있는 극한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대단한 일"**

※ 참석 전문가 : 한양대학교 000 교수, 광운대학교 000 교수, 삼성전자 000,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000, 한화시스템 000, KT 000 등

○ (소방노조) **"이번 성능검증 시연회는 현장에 도움이 될 것"**

※ 참석 노조 : 소방 관련 6개 노조 10명 참석

사례번호 ⑱

소방청 장비총괄과
적극행정 우수사례(2)

<table>
<tr><td colspan="2">사례제목[1]
(정책명[2])</td><td colspan="5">소방차량 긴급출동시 운행 안전과 연간 3억원 이상 예산절감까지
(소방청에서 직접 무상으로 운영하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 법정의무 교육)</td></tr>
<tr><td colspan="2">사례요약[3]</td><td colspan="5">도로교통공단에서 유상으로 수강하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자체 개설하여 전국 소방관서에 무상교육 제공하고 일정에 제한되지 않도록 편리한 상시 수강(사이버교육) 및 관리체계 마련
※ 교육 개설 후 3개월간 수료자 37,609명(신규 13,433, 정기 24,176명), 예산절감 7억원</td></tr>
<tr><td colspan="2">기관명[4]
(부서명)</td><td colspan="5">소방청
장비총괄과</td></tr>
<tr><td rowspan="2">분야[5]</td><td>1차</td><td colspan="5">규제혁신 여부 Y □ N ■</td></tr>
<tr><td>2차</td><td colspan="5">역동적 경제 □ 살기좋은 대한민국 □ 담대한 미래 □ 따뜻한 동행 □
기타 ■ (직접입력 :)</td></tr>
<tr><td colspan="2" rowspan="4">공적자[6]</td><td>구분</td><td>부서명</td><td>직급</td><td>성명</td><td>연락처</td></tr>
<tr><td>주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
<tr><td>부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
<tr><td>부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각종대회 수상실적[7]</td><td colspan="5">해당없음</td></tr>
<tr><td colspan="2">가점대상 여부[8]
(입증자료 필수)</td><td colspan="5">국민추천사례(+3점) □ 사회적 재난 대응(+3점) □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3점) □ 협업사례(+3점) □</td></tr>
<tr><td colspan="2">기타 해당 여부[9]</td><td colspan="5">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사례 □ 기관 중점 추진과제 □</td></tr>
<tr><td rowspan="2">사례내용</td><td>상황[10]</td><td colspan="5">• 무상교육 채널 부재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유상교육 수강(교육비 지출)
↳ 교육비용 : 신규교육 24,000원(3H), 정기교육(3년마다) 16,000원(2H)
• 교육대상자 희망 일정이 아닌 소속기관 요구 일정에 교육신청 및 수강
↳ 교육신청 및 수강 일정에 제한되지 않도록 편리한 상시수강 여건 마련 필요
• 신규 및 정기 교육대상자(이수자)의 체계적인 관리 미흡</td></tr>
<tr><td>난관[11]</td><td colspan="5">• 법정교육 개설 경찰청 협의 및 도로교통공단 교육자료 무상제공 설득
- (교육개설) 국가기관 소속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기관 자체교육 개설 운영 가능
- (교육자료) 교육 교재 및 콘텐츠는 도로교통공단 제작 후 경찰청 감수교재만 사용 가능
• 상시 온라인 교육수강이 가능한 교육콘텐츠 학습지원 서비스 필요</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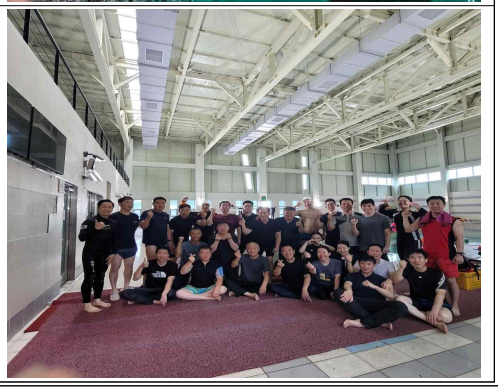
	적극[12]	• 소방청 **자체 교육운영** 및 **교육자료 공동활용 경찰청 협의**(3회) • **도로교통공단 교육자료**(교재 및 콘텐츠) **무상제공 설득 협의**(5회) - **(공단 입장)** 교육콘텐츠 제작비용 소요에 따른 교육자료 유상 제공 입장 • **도로교통공단 교육관리처**(강원 원주) **방문 교육자료 무상제공 협의**('24.3.18.) - **(상호지원)** 향후 교육콘텐츠 제작 지원 조건으로 교통공단 교육자료 무상제공 ↳ 소방청 현장 촬영, 장소 및 장비, 교통사고 자료 제공 등 지원 조건 • **상시 온라인 교육수강**이 가능한 교육콘텐츠 학습지원 **서비스 개설** - **(교육운영)** 소방청 나라배움터 사이버교육 개설 및 상시 교육과정 운영('24.4월) • **월 단위 교육 수료 현황** 및 **실적 체계적 관리**(개인 ▸ 소방서 ▸ 소방본부 ▸ 소방청)
	효과[13] **및 미담사례**[14]	• 기관 **자체 무상교육 개설·운영**에 따른 **연간 3억원 이상 예산절감** - 교육 개설 후 3개월 만에 **수료자 37,609명**(신규 13,433, 정기 24,176명), **예산절감 7억원** **연간 교육수요 및 교육비 예산절감 예측 : 약 2만여명 / 약 3억4천만원** · **(정기교육)** 17,794명(284백만원) ※ 현장대원 53,381명 / 3년마다 재교육 · **(신규교육)** 2,289명(55백만원) ※ 최근 3년 소방공무원 채용인원 평균 • 교육신청 및 수강 일정 제한없이 **상시 온라인 교육수강 편의 제공** •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가능 - 월 단위 교육 현황 및 실적관리, 수료자 현황 사이버교육센터 일괄다운로드 가능 • 긴급차동차 운행 **소방대원 안전**에 기여 • 교육비 납부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 최소화

사례번호 ⑲

소방청 소방항공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table>
<tr><td rowspan="2">사례제목[1]
(정책명[2])</td><td colspan="5">호수, 강, 바다 등 헬기 수상추락 사고 시 민간헬기 탑승대원 생존율 향상 제고 목적, 헬기 동체 탈출 및 생존수영 등 실전 훈련 추진</td></tr>
<tr><td colspan="5">민간헬기 탑승대원 수상 추락사고 대비 생환훈련, 국내 최초 실시</td></tr>
<tr><td>사례요약[3]</td><td colspan="5">‣최근 10년간 헬기가 담수 접근 중 추락 등 수상 추락사고로 사망자가 지속적 발생(7건 발생, 사망 6명)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서울·부산 지방항공청과 협의, 민간헬기 탑승대원 대상 수상생환 훈련과정 개설
‣ 국내 최초, 민간 헬기업체 8개 기관 44명의 교육생 배출, 민간 헬기 항공대원 생존율 향상 등 민간헬기 대원 안전 관리 강화 기여</td></tr>
<tr><td colspan="2">기관명[4]
(부서명)</td><td colspan="5">소방청 장비기술국
소방항공과</td></tr>
<tr><td rowspan="2">분야[5]</td><td>1차</td><td colspan="5">규제혁신 여부 Y □ N ■</td></tr>
<tr><td>2차</td><td colspan="5">역동적 경제 □ 살기좋은 대한민국 ■ 담대한 미래 □ 따뜻한 동행 □
기타 □ (직접입력 :)</td></tr>
<tr><td colspan="2">공적자[6]</td><td>구분</td><td>부서명</td><td>직급</td><td>성명</td><td>연락처</td></tr>
<tr><td colspan="2"></td><td>주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각종대회 수상실적[7]</td><td colspan="5">해당없음</td></tr>
<tr><td colspan="2">가점대상 여부[8]
(입증자료 필수)</td><td colspan="5">국민추천사례(+3점) □ 사회적 재난 대응(+3점) □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3점) □ 협업사례(+3점) □</td></tr>
<tr><td colspan="2">기타 해당 여부[9]</td><td colspan="5">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사례 □ 기관 중점 추진과제 □</td></tr>
<tr><td rowspan="2">사례내용</td><td>상황[10]</td><td colspan="5">‣최근 10년간 헬기 담수 접근 중 추락 등 헬기 수상 추락사고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7건 발생, 6명 사망)
- 사고분석 분석결과 수중 추락사고는 대부분 헬기로부터 탈출하지 못하여 사망
- 헬기가 수상 추락 할 경우 무거운 엔진이 아래쪽으로 전복되어 비상탈출문 위치를 확인 하지 못해 탈출 실패로 익사하는 경우가 대부분
↳ 평상시 비상탈출문 작동 절차와 수중 탈출 절차 훈련이 반드시 필요
※ 미국 해군 연구자료에 따르면 헬기 수상추락 사고 시 헬기에서 탈출한 생존자의 92%는 생환훈련을 이수 한 것으로 확인</td></tr>
<tr><td>난관[11]</td><td colspan="5">‣수상추락사고로 민간헬기 조종사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민간헬기 탑승대원 생환훈련은 관련 법령의 법적 의무교육에서 제외되어 지원근거 부족으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없었음</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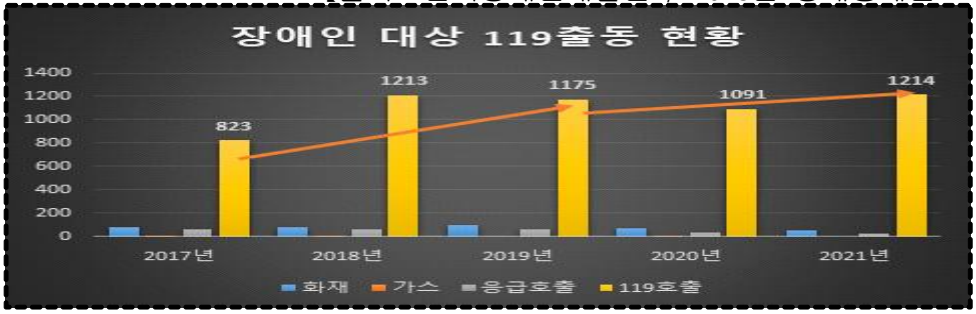
		‣민간헬기 업체에서는 산불진화, 화물운송 등 **조종업무 공백** 발생 및 생환훈련 **교육비용에 대한 문제** 등으로 훈련 참여 기피 ‣소방청에서는 민간헬기 조종사에 대한 생환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지만 민간헬기 항공대원에 대한 인력 등 정보 부족으로 교육 수요 조사 등 민간헬기 탑승대원 대상 생환훈련 계획추진은 **현실적 어려움**
	적극[12]	**(정책추진)** ‣ '23년 10월 포천에서 발생한 수상 추락사고 이후, 소방청에서 민간 헬기 탑승자에 대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차원의 생환훈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토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민간헬기 탑승대원 대상 **생환훈련 과정 개설 제의** ‣ 소방청, 국토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서울·부산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의 관계자와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민간헬기 탑승대원 생환훈련 추진** **(업무협업)** ▶ **(소방청)** 민간헬기 탑승대원에 대한 생환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방청 생환훈련 시설의 운영부서** 관계자와 수용인원 일정 등에 대해 사전협의 - 민간헬기 탑승대원에 맞는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개발** - 산불조심기간 등 민간헬기 조종사 임무가 많은 시기를 고려, **교육수요가 가장 많은 기간으로 일정조율** - **교육비용은** 민간헬기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생환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환훈련 교육비 **무상지원** ▶ **(관계기관)** 국토부 및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다수의 민간 헬기 사고를 통해 민간 헬기 탑승자에 대한 생환훈련 필요성을 인식하고 민간 헬기업체 **생환훈련 교육대상자를 사전 조사**
	효과[13] **및 미담사례**[14]	**(주요성과)** - 국내 최초로 민간헬기 업체 항공대원 **44명 생환훈련 수료** - **항공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예방으로 헬기 조종인력 안정적 확보 및 비용절감(양성비용)** ↳ 숙련된 헬기 조종사를 양성하려면 평균 8년7개월의 기간과 1인당 약 41억원이 예산이 소요 ※ 향후 20여개 업체 200여명의 **민간헬기** 항공대원들이 모두 **수상 생환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업무추진**

		훈련 대상 ~ '21년 이전: 소방청 대원 → '22년 ~: + 산림청, 닥터헬기 대원 → '24년 ~: + 민간헬기 탑승대원 **(미담사례 - 민간헬기 탑승대원 생환훈련 교육생 인터뷰 내용)** - 실제 수상 추락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음(더스카이 OOO조종사) - 사고사례를 이론상으로는 접했지만 실제 사고상황을 가정하여 직접 훈련해 본 것은 이번이 처음, 앞으로도 민간 항공대원들에게도 정기적인 훈련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음(우리항공 OOO조종사)    

사례번호 ⑳

소방청 정보통신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table>
<tr><td colspan="2">사례제목[1]
(정책명[2])</td><td colspan="5">청각.언어 장애인의 긴급상황, 이제 119로 직접 신고하세요!</td></tr>
<tr><td colspan="2">사례요약[3]</td><td colspan="5">소방청-손말이음센터 간 협업을 통해 119 신고시스템과 손말이음센터 통신중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청각·언어 장애인이 긴급상황을 직접 119로 영상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 119 신고를 통한 일원화된 실시간 3자 영상통화* 서비스 제공
* 장애인 ⇄ 손말이음센터 ⇄ 119종합상황실

</td></tr>
<tr><td colspan="2">기관명[4]
(부서명)</td><td colspan="5">소방청
(장비기술국 정보통신과)</td></tr>
<tr><td rowspan="2">분야[5]</td><td>1차</td><td colspan="5">규제혁신 여부 Y □ N ■</td></tr>
<tr><td>2차</td><td colspan="5">역동적 경제 □ 살기좋은 대한민국 ■ 담대한 미래 □ 따뜻한 동행 ■
기타 □ (직접입력 : 평등권 실현)</td></tr>
<tr><td colspan="2" rowspan="3">공적자[6]</td><td>구분</td><td>부서명</td><td>직급</td><td>성명</td><td>연락처</td></tr>
<tr><td>주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
<tr><td>부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각종대회 수상실적[7]</td><td colspan="5">해당사항 없음</td></tr>
<tr><td colspan="2">가점대상 여부[8]
(입증자료 필수)</td><td colspan="3">국민추천사례(+3점) □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3점) □</td><td colspan="2">사회적 재난 대응(+3점) ■
협업사례(+3점) ■</td></tr>
<tr><td colspan="2">기타 해당 여부[9]</td><td colspan="3">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사례 □</td><td colspan="2">기관 중점 추진과제 □</td></tr>
<tr><td>사례 내용</td><td>상황[10]</td><td colspan="5">○ 청각.언어 장애인의 긴급상황 시 119 직접 신고는 신고자(장애인)와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의사소통에 한계 발생
○ 2023년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화재, 구조, 구급 등 119의 도움이 필요한 신고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 2023년 장애통계연보 】

</td></tr>
</table>

난관[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손말이음센터*에서 청각·언어 장애인의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나, 119 신고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119 이용 불편** 및 **긴급상황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 존재

* 청각·언어 장애인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통신중계서비스 제공(과기정통부)

청각·언어 장애인 119신고 방 법	(**직접신고**) 정확한 신고정보 확보 불가하여 **문자 신고로 전환** 요청 (**중계신고**) 복잡한 절차로 신고 불편 및 긴급상황 시 초동대응 지연

□ **시스템 개선 전 손말이음센터 중계 신고 사례**

▸ '23. 09. 27. 09:19분경 대구 동구 신서동 000 번지 청각.언어 장애인이 출근 중 들개 3마리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중계 신고**가 119상황실로 접수되었으며, 소방차량을 출동시켜 안전조치 함



적극[12]

□ **소방청과 손말이음센터 간 신고시스템 개선 활용 전·후**

활용 전	활용 후
· 청각.언어 장애인의 직접신고 불가 · 통신**중계(대리)신고**로 인한 신고지연 · 신고 영상을 직접 확인 불가로 현장정보 수집의 제한 · **손말이음센터**에서 **119상황실**로 **신고 내용 전달**	· 청각.언어 **장애인**의 **직접 신고 의사소통** 가능 · 신고자(장애인)와 119상황실근무자, 손말이음센터간 **3자간 영상통화**를 통해 **365일 실시간 통역**

※ 119긴급 신고서비스 개선 전·후 비교(시도 119종합상황실)



<개 선 전> <개 선 후>

		□ **추진경과** ○ **(운영 개선)** 7개 시도* 손말이음센터와 협업하여 공용휴대폰을 이용한 핫라인 구축('21.4~'23.11.)을 통해 119 긴급신고 지원 일부 개선 운영 중 * 강원, 경기, 광주, 대구, 인천, 전남, 충남 119종합상황실 - (한계점) 하나의 단말기로 동시 다수신고 중계 불가 및 휴대 불편 ○ **(시스템 개선)** 전국 모든 청각·언어 장애인의 119 긴급신고 접근성 개선을 위한 소방청-손말이음센터 간 시스템 연계 방안 논의 개시('24.1월) □ **추진성과** ○ **(기술검토)** 소방청 119다매체신고시스템과 손말이음센터 통신중계서비스 시스템 간 연계 방안 등 사전 기술검토 개시('24.1월) ○ **(계획수립)**「소방청 - 손말이음센터」간 119긴급신고 3자 영상통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확정('24.5.7., 정보통신과-2678호) ○ **(현장소통)** 통신중계서비스 운영실태 확인, 119긴급신고 서비스의 효율적 개선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연계 등 현장 소통회의('24.5월) ○ **(예산편성)** 손말이음센터와 119다매체 신고시스템간 연계를 위한 예산편성 확보('24.6.27. / 8천만원)
	효과[13] 및 미담사례[14]	① **기대 성과 등** **(칸막이 해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부처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신고시스템과 수화 서비스 시스템을 협업·연계하여 활용도 제고 **(접근성 향상)** 사회적 약자 및 통신 소외계층인 청각·언어 장애인의 119 긴급신고 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행정 사각지대 보완 **(평등권 실현)** 청각·언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119를 통해 신속하고 정당한 긴급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 ※ 장애인차별법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② **향후 계획** **(입 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서 작성 및 조달청 입찰진행(8월) **(계 약)**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제 선정 및 계약진행(9월) **(연 계)** 손말이음센터와 소방청119다매체 시스템간 연계(11월) ※ 119신고 접수대에 **107번**(손말이음센터 호출) 동시 3자 영상통화 버튼 생성 **(시범운영)** 3자 영상통화 신고시스템 시범운영(11월) **(전격운영)**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 전격 시행 운영(12월)

사례번호 ㉑

중앙소방학교
적극행정 우수사례

<table>
<tr><td colspan="2">사례제목[1]
(정책명[2])</td><td colspan="5">디지털 대전환 시대, 생성형 AI로 소방 교육과 현장 대응의 혁신을 이루다
(생성형 AI 기반 소방 교육 및 현장 대응 효율성 강화 위한 챗봇 개발 등)</td></tr>
<tr><td colspan="2">사례요약[3]</td><td colspan="5">소방청 중앙소방학교는 디지털 AI 기술을 활용해 소방교육과 현장 대응 효율성을 높임. 기술 도입 초기의 난관을 극복하고, 교직원 및 교육생의 역량을 강화하였고 AI 기반 교육 콘텐츠와 챗봇을 개발하여 쉽고 빠른 대응이 가능 하였음. 또한, 이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과 현장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하였음.</td></tr>
<tr><td colspan="2">기관명[4]
(부서명)</td><td colspan="5">소방청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td></tr>
<tr><td rowspan="2">분야[5]</td><td>1차</td><td colspan="5">규제혁신 여부 Y ☐ N ☑</td></tr>
<tr><td>2차</td><td colspan="5">역동적 경제 ☐ 살기좋은 대한민국 ☐ 담대한 미래 ☑ 따뜻한 동행 ☐
기타 ☐ (직접입력 :)</td></tr>
<tr><td colspan="2" rowspan="4">공적자[6]</td><td>구분</td><td>부서명</td><td>직급</td><td>성명</td><td>연락처</td></tr>
<tr><td>주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
<tr><td>부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
<tr><td>부 공적자</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각종대회 수상실적[7]</td><td colspan="5">해당없음</td></tr>
<tr><td colspan="2">가점대상 여부[8]
(입증자료 필수)</td><td colspan="5">국민추천사례(+3점) ☐ 사회적 재난 대응(+3점) ☐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3점) ☐ 협업사례(+3점) ☐</td></tr>
<tr><td colspan="2">기타 해당 여부[9]</td><td colspan="5">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사례 ☐ 기관 중점 추진과제 ☐</td></tr>
<tr><td rowspan="2">사례내용</td><td>상황[10]</td><td colspan="5">• (사회적 필요성) 소방 현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로, 최근의 디지털화 및 AI 기술 발전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 특히, 소방 교육훈련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교육 및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
• (기관 중점과제) 중앙소방학교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소방교육훈련의 디지털 혁신을 중점 과제로 삼고,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추진</td></tr>
<tr><td>난관[11]</td><td colspan="5">① (기술적 난관) AI 기술 도입 초기 단계에서 교육 콘텐츠에 적합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많은 기술적 도전이 있었음. 특히, 소방 교육의 특성상 실시간 대응과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기술적 완성도가 요구
② (인프라 부족) AI 활용을 위한 인프라(공간, 인력 등)가 부족하여 관련 프로그램 구독, 데이터 수집 및 연구·개발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또한, AI 연구 및 적용을 위한 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도 초기에 어려움 발생.
③ (교직원 저항) 새로운 디지털 기술 도입에 대한 교직원들의 저항감이 존재. 익숙하지 않은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 부담감과 기존의 교육 방식에 대한 고집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작용.</td></tr>
</table>

적극[12]

❶ **(기술적 지원 강화)** AI 기술 도입 및 적용을 위해 내부적으로 **TF팀**(DIMU)*을 구성하고, 프로젝트 매니저, AI 엔지니어, 교육훈련 전문가로 **분과**를 **나누어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 각 분과별로 명확한 목표와 역할을 부여하여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 AI에 소방교육을 분석·학습시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활용하기 위해 디지털로 무장한 단체

※ 2024. 3.

단 장	중앙소방학교장	
1분과(프로젝트 매니저)	**2분과** (AI 엔지니어)	**3분과** (교육훈련전문가)
일정 및 목표 관리, 진행상황 추적	ChatGPT 등을 활용하여 교육자료 생성, 앱 개발	교육훈련 전문지식 제공 및 적합성 평가 등

❷ **(인프라 구축)** AI 활용 연구를 위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 **AI 배양 및 AI 복합문화 스튜디오**[1] 를 설치하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교육 콘텐츠를 홍보 및 확산. 또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다양한 챗봇**을 **개발**하는 등[2] **업무 효율성을 높임**.

1」 생성형 AI 기술을 연구·활용한 공간 구축(VR·AI 활용 및 커뮤니티 공간)

2」 ┌ **(교육 콘텐츠 혁신) 강의자료 및 커리큘럼 작성법**(ChatGPT, GAMMA 등 활용)

├ **(업무 효율성 증진)** 회의 등 **결과·메모보고 작성법**(Clova Note, ChatGPT, 챗봇)

└ **(현장 대응력 강화) 현안 이슈 정리 및 재난현장 브리핑 자료 작성법**(챗봇)



AI 배양 스튜디오



AI 복합문화 스튜디오



"NFSA 중앙소방학교" 유튜브 개설



챗봇(Chatbot) 개발

❸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들이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교육에 통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대전환 시대: 생성형 AI A to Z'**라는 주제로 **교육**과 **콜로키움**을 실시. 이를 통해 교직원들이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항감 해소**

※ **교육생** 대상, AI 활용 능력 향상 위한 강의 확대 진행(챗봇 크리에이터 등)



교직원 콜로키움(Colloquium) | **교육생 강의**

	효과[13] 및 미담사례[14]	• **(추진 효과)** ❶ **정성적 성과**: 생성형 AI 기반의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교육자료 작성**과 **현장 대응 자료 제공**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음. 또한, 교직원들은 AI를 활용한 **새로운 교육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교육의 질**이 **향상**. ❷ **정량적 성과**: **AI 활용 연구** 및 **인프라**를 **구축** 하였으며, **전국 소방학교 교직원** 및 **교육생 역량 강화 교육**을 **5회** 실시. 또한, AI를 활용한 **스마트 교육 콘텐츠**를 **7건 개발**. • **(미담사례)** ❶ AI 기반 **챗봇**을 활용한 **보고서 작성** 및 **재난현장 브리핑 자료 작성 도구**를 사용한 한 교직원 및 교육생이 **“이제는 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교육이나 현장 대응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며 **감사**의 말을 전했음. ❷ 중앙소방학교의 AI 기술 활용 사례가 소방청장님에게 소개되면서 **“중앙소방학교의 혁신적인 시도가 국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는 격려와 칭찬을 받았음.  **생성형 AI 기술 활용 사례 발표** ⇨ 이번 사례를 통해 **중앙소방학교는 디지털 AI 기술을 활용한 소방교육과 현장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음

사례번호 ㉒

중앙119구조본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table>
<tr><td colspan="2">사례제목[1]
(정책명[2])</td><td colspan="5">전기사용량 분석과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
「2024년도 중앙119구조본부 에너지(전기) 절약」</td></tr>
<tr><td colspan="2">사례요약[3]</td><td colspan="5">○ 부서별 전기 사용량 정밀 분석, 전기절약 및 계약전력 조정
○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통한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 및 탄소중립 등 기후환경 운동 적극 동참</td></tr>
<tr><td colspan="2">기관명[4]
(부서명)</td><td colspan="5">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td></tr>
<tr><td rowspan="2">분야[5]</td><td>1차</td><td colspan="5">규제혁신 여부 Y ☐ N ☐</td></tr>
<tr><td>2차</td><td colspan="5">역동적 경제 ☐ 살기좋은 대한민국 ☐ 담대한 미래 ☑ 따뜻한 동행 ☐
기타 ☐ (직접입력 :)</td></tr>
<tr><td colspan="2" rowspan="3">공적자[6]</td><td>구분</td><td>부서명</td><td>직급</td><td>성명</td><td>연락처</td></tr>
<tr><td>주 공적자</td><td rowspan="2"></td><td></td><td></td><td></td></tr>
<tr><td>부 공적자</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각종대회 수상실적[7]</td><td colspan="5">해당없음</td></tr>
<tr><td colspan="2">가점대상 여부[8]
(입증자료 필수)</td><td colspan="5">국민추천사례(+3점) ☐ 사회적 재난 대응(+3점) ☐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3점) ☐ 협업사례(+3점) ☐</td></tr>
<tr><td colspan="2">기타 해당 여부[9]</td><td colspan="5">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사례 ☐ 기관 중점 추진과제 ☐</td></tr>
<tr><td rowspan="2">사례내용</td><td>상황[10]</td><td colspan="5">○ 전기사용량·요금단가 상승과 관련예산 부족으로 인한 부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위기 지속</td></tr>
<tr><td>난관[11]</td><td colspan="5">○ 전기요금 단가 상승과 한정된 예산으로 청사 운영에 지속적인 압박
○ 각 부서별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 불가능, 통제곤란
- 사용자 및 직원들의 협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 업무 특성의 다양화로 일관된 전기절감 기준설정 모호
- 대기실 등 개인공간 운영에 따른 절약성취도 비교판단 곤란
○ 계약전력 재조정에 한국전력측 협조가 필요하나 전반적 불협조
- 계약전력 설정의 현실부조화로 인한 불필요한 기본요금 지출
- 울산센터 재조정 사례 등에서 한전 불협조로 어려움 있었으나 끈질긴 설득으로 결실 이끌어냄
○ 기존 과대설치된 ‘비상용 발전기’ 용량 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거대 공사비용 발생
- 전기실에 설치된 비상발전 500KW 규모 설비를 탈거하고 전체 설비 용량에 맞춰 작은 규모의 비상발전기를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
- 발전기 뿐만 아니라 주변 연결된 전기배선을 해체하고 다시 결선해야 하는 문제
- 현 체제로 운영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상주)해야 하는 조건충족을 위해 인력(공무직) 운영 및 소요비용 큰 부담</td></tr>
</table>

	적극[12]	○ 전년·당해 대비 부서별 전기 사용량과 증가원인 정밀 분석 - 2023 vs 2024 동기간 대비, 부서별 전기사용량 및 사용원인 분석 - 특수구조대 및 화학센터 운영실태 확인점검(5월) ※ 지진대비 비축기지 등 신규청사 준공으로 인한 변동성 반영 ○ 계약전력, 최대전력 사용량 확인 → 운영 안전성 범위 내에서 과설정 부서 계약전력 재조정(하향) ※ 계약전력 최적화를 통해 기본요금 감소,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절감 등 비용절약 효과 발생 ○ 비상용 발전기 용량 조정(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조건 완화, 장기적) - 500kw급 비상발전기는 2개 청사에서 운영중(영남대, 수도권대) ※ 500kw 비상발전기가 설치된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근무하여야 하며, 용역업체에 의뢰할 경우 연간 7~8천만원 비용발생 - 단기적으로 비상발전기 조정·탈부착 등 즉시조정 조치는 어려우며, 비상발전기 내구연한 등 고려하여 중장기 교체 추진 ※ 비상발전기는 한전으로부터 공급되는 상용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청사운영에 필요한 전력공급을 비상시 담당하는 발전기로 최근 비상발전 운영사례는 없었음. 비상시 소요전력이 100~200kw 수준임을 감안하여 현실화 필요 ○ 일회성 물품 자제, 인쇄용지 및 카트리지 등 절약, 보고문화 개선 등 기타 환경친화적 개선책 추진
	효과[13] **및 미담사례**[14]	【계약전력 조정】 ○ 울산센터 계약전력 200kW→130kW로 조정완료 - 월 전기 기본요금 **43만원(70 × 6,160원)** 절감 ○ 시흥센터 계약전력 75kW→72kW로 조정 추진 중 - 월 기본요금 **3만원**, 월 전기안전관리 대행 비용 **12만원** 절감 ○ 여수센터 등 계약전력 조정 검토중 【전기절약 실천】 ○ 냉난방 수요 효과적 통제 및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한 사용 전력량 전반적으로 감소추세 - 영남대 경우, 6월 전기사용량이 전년 동월대비 약 8% 감소 *참고2 ※ 6월 전기요금 전년대비 **2.3백만원 감소** - 불필요한 에어콘·온도설정 조정, 복도 및 화장실 전등 사용 최적화, 대기실 불필요 전기 사용여부 상시점검 등 ○ 환경친화적 보고문화 개선 등 사무환경 정비 - 듀얼모니터 대체할 와이드 타입 원모니터 체제로 조정(향후) - 전자적 보고방식 이용 등 출력보고문화 개선(상황보고서 SNS활용) - 종이컵, 인쇄용지·카트리지 등 지류문화 사용 개선